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6. 1



목 차

1. 평가개요	1
(1) 중점 평가방향	1
(2) 평가추진 개요	1
2. 평가결과	4
(1) 총평	4
(2) 주요성과	8
(3) 개선·보완 사항	10
(4) 평가결과 종합	13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8
I-1-① 산업 혁신성장 성과확산 기반 마련	17
I-1-② 산업AI 활용 확산	19
I-1-③ 첨단·주력산업 우수인재 양성	21
I-1-④ 산업 성장 지향형 그린전환 추진	23
I-2-①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25
I-2-② 소재·부품·장비 튼튼한 협력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27
I-2-③ 철강·세라믹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29
I-2-④ 화학산업 기반조성 지원 및 규제 해소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31
I-3-① 기술·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계·로봇·방위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진	33

I-3-②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산업경쟁력 제고	35
I-3-③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기반 강화 ·	37
I-3-④ 엔지니어링·디자인 역량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39
I-4-① 차세대 핵심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41
I-4-② 안정적인 국내 배터리 생태계 조성	43
I-4-③ 바이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45
I-4-④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 및 차세대 탄소·나노 산업 육성	47
I-4-⑤ 미래 디스플레이·가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	49
I-5-① 석유수급의 안정화·효율화 기반 마련	51
I-5-② 안정적인 가스 수급 기반 확충	53
I-5-③ 조기폐광 합의의 차질없는 진행과 안정적인 석·연탄 수급관리	55
I-5-④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반 확충	57
I-5-⑤ 자원안보 위기 대응역량 강화	59
II-1-① 압도적 기술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지원	61
II-1-② 미래 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도전혁신적 R&D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성 강화	63
II-1-③ 파급력 있는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65
II-2-① 5극3특 균형성장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67
II-2-②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69
II-2-③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RE100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71
II-3-① 성장지향형 중견기업 지원정책 기반 강화	73
II-3-② 중견기업 R&D 지원기반 확충	75

II-3-③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대규모 쇼핑행사 개최	77
III-1-①	산업계와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통상 연계 ..	79
III-1-②	북미지역 통상·산업·에너지 협력강화 및 한미 FTA의 안정적 이행	81
III-1-③	중남미·대양주 국가와 통상 협력강화 및 수출확대 기반 조성	83
III-1-④	유럽과의 전략적 경험 강화, 한-EU FTA 이행 및 통상현안 대응	85
III-2-①	신북방 국가 통상현안대응 및 국내기업 신흥시장 진출기반 조성	87
III-2-②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현안 대응 및 협력강화	89
III-2-③	동남아·서남아 지역 국가와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통상협력 추진으로 시장진출 경쟁력 제고	91
III-2-④	중동·아프리카 국가와의 전략적 경험 활성화	93
III-3-①	새로운 통상 이슈 대응·정책수립 및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조성	95
III-3-②	디지털 통상 규범 선도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97
III-3-③	긴밀한 국내소통을 기반으로 기후에너지 규범 논의 선제 대응	99
IV-1-①	(신규) 신규 통상협정 여건 조성 및 협상 개시 추진	101
IV-1-②	(협상)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상 전개	103
IV-1-③	(이행) 통상협정의 체계적 이행관리 및 규범 현대화 추진	105
IV-1-④	(활용) FTA 활용 촉진 지원 및 FTA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107
IV-2-①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109
IV-2-②	다자통상 현안 대응 및 협상·협력 강화	111
IV-2-③	무역협정상 법적 이슈 대응	113
V-1-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	115

V-1-②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117
V-2-①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119
V-2-②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 기반구축	121
V-3-①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대외 수출통제 적시 대응	123
V-3-②	산업기술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	125
V-4-①	선진무역구제기관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127
V-4-②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산업피해 및 덤핑조사 강화	129
V-4-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이행 기능 강화	131
V-5-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적 기반 강화	133
V-6-①	원전 산업 해외 진출 지원	135
VI-1-①	민간주도 표준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신산업 및 지속가능 사회 관련 표준화 추진	137
VI-1-②	표준 전문 인력양성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강화	139
VI-2-①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기능 강화	141
VI-2-②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안전기준 정비	143
VI-3-①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사업화 지원	145
VI-3-②	상거래 신뢰성 강화 및 계량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147
VI-4-①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통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강화	149
VI-4-②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규제합리화	151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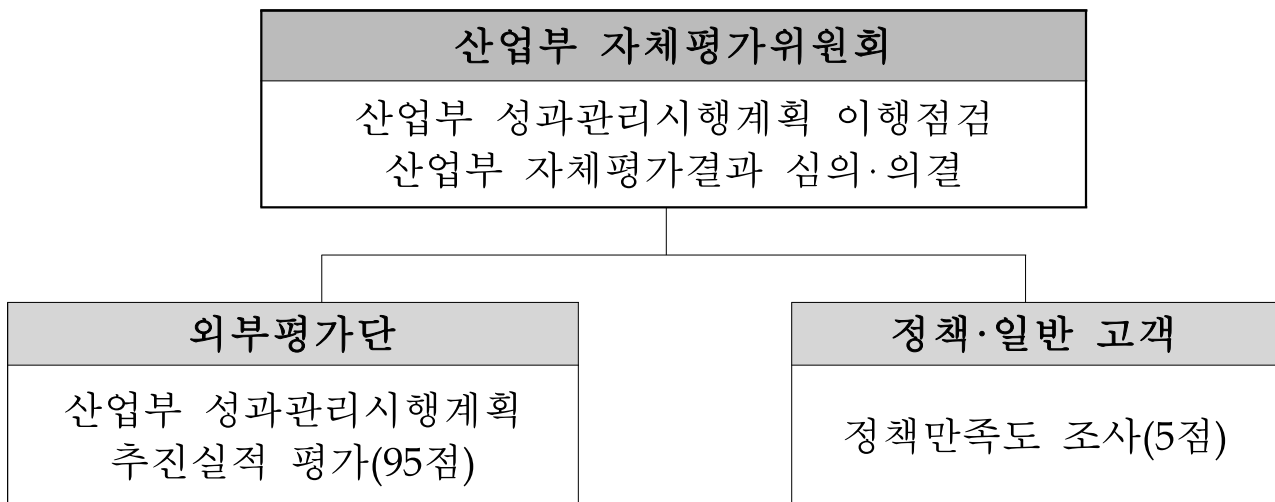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 국정과제, 일자리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25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평가
- ☐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해당 분과의 과제만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향상
 - 자체평가 실시 전 평가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평가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하여 개개인의 평가 편향을 조정함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평가방법

- (평가주체구성) 외부 평가단 구성
 - * (외부평가단) 자체평가위원 20명

- (과제배분) 분과별 평가위원의 이해도가 높은 해당 분과의 과제를 평가대상으로 배분

* 소속분과 과제 100% 평가

- (평가자료 사전배포) 자체평가 실시 전 평가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평가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평가실시) 외부평가단이 개인별로 배분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평가

* (성과목표 23개) 목표 1개당 외부위원 5명 평가
(관리과제 68개) 과제 1개당 외부위원 5명 평가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성과목표 23개 및 27개 성과지표

- 관리과제 68개 및 179개 성과지표

구분	산업정책	산업기반 (국표원 포함)	통상국제	무역투자	계
성과목표	5개	7개	5개	6개	23개
관리과제	22개	17개	18개	11개	68개
합계	27개	24개	23개	17개	91개

- 평가지표

① 성과목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와 정책고객만족도를 평가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목표치 달성여부, 적극성 등을 확인하여 배점
(정책고객만족도) 국별 대표 관리과제를 1건씩 선정 후 평가

< 성과목표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 성과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 정책고객만족도

② 관리과제

- 정책활동 단계에 따라 4개 평가항목 및 6개 평가지표와 가점으로 구성

* (정책활동 단계) 계획 수립 → 시행과정 → 정책성과 → 정책영향

< 관리과제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계획 수립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 여부	6	6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정책분석과 대비책 수립의 적절성	7	7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신설)	-	2	매년 각 부서의 관리과제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반영 여부를 신설
시행 과정	2.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계획대비 일정준수 여부(확대)	7	8	각 부서의 계획 완수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배점 소폭 확대
	3.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확대)	8	10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가 급격하고 빈번하게 이뤄지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정책 성공의 핵심 요인이 됨에 따라 배점 일부 확대
정책 성과	4.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4	14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13	13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20	
정책 영향	6. 정책영향 발생도	○ 계획 수립시 예상 정책효과 발생 정도(확대)	13	15	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이기에 확대
		○ 정책품질 제고 노력도(삭제)	12	-	측정 방식과 대상이 모호하여 삭제
		○ 정책환류(이동 및 확대)	-	5	각 부서가 스스로 정책 추진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차년도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환류 노력을 기존 가감점 지표에서 정규 지표로 이동 및 확대
가감점		○ 핵심관리과제	±2	±2	
		○ 협업 성과가 뛰어난 과제	+2	+2	
		○ 정책현장방문 및 현장의견수렴 우수 과제	+2	+2	
		○ 정책환류(이동 및 확대)	+1	-	
		○ 자료제출 적시성(신설)	-	-1	자료제출 협조도 제고를 위한 감점 신설
합 계		○ 90점 환산 점수로 반영	107	106	

※ 국정·일자리, 안전, 환경, 상생 협력, 공동체 복원, 지역 경제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 과제 등

2. 평가결과

(1) 총 평

□ '25년도 총 84개 과(팀)의 68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1등급 4개(5%), 2등급 10개(15%), 3등급 10개(15%), 4등급 20개(30%), 5등급 10개(15%), 6등급 10개(15%), 7등급 4개(5%)로 나타남
- 2등급 이상 과제는 '차세대 핵심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I-4-①)' 등이며, 6등급 이하 과제는 '조기폐광 합의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정적인 석·연탄 수급관리(I-5-③)'등인 것으로 평가됨

< '25년 실별 자체평가 결과 현황 >

구분	산업정책	산업기반	통상국제	무역투자	산업기반 (국표원)	계
1등급	2	0	2	0	0	4
2등급	2	1	6	1	0	10
3등급	4	1	2	3	0	10
4등급	5	3	5	5	2	20
5등급	3	3	2	0	2	10
6등급	4	1	0	1	4	10
7등급	2	0	1	1	0	4
계	22	9	18	11	8	68

□ 총 68개 관리과제의 17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109.47%로 나타남

- 16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산업경쟁력 제고(I-3-②, 자동차과)
: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만대) 98.31% 달성

*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산업경쟁력 제고(I-3-②, 자동차과)
: 자동차 R&D 사업 사업화 성공률(%) 94.13% 달성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기반 강화 (I-3-③, 조선해양플랜트과)

: 전세계 발주 중 한국 고부가선박 수주비중 97.77% 달성

* 안정적인 국내 배터리 생태계 조성(I-4-②, 배터리전자전기과)
: 이차전지 기술개발 분야 SMART 점수(점) 94.87% 달성

* 안정적인 국내 배터리 생태계 조성(I-4-②, 배터리전자전기과)
: 이차전지 수출량(100Ton) 84.58% 달성

* 바이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I-4-③, 바이오융합산업과)
: 바이오헬스산업수출액(억불) 97.56% 달성

* 안정적인 가스 수급 기반 확충(I-5-②, 가스산업과)
: LPG 연료비 절감률 (%) 91.92% 달성

* 안정적인 가스 수급 기반 확충(I-5-②, 가스산업과)
: 천연가스 주배관망 및 도외자 배관 확충 (km) 91.73% 달성

* 조기폐광 합의의 차질없는 진행과 안정적인 석·연탄 수급관리
(I-5-③, 석탄산업과)
: 국산 무연탄 비축실적(천톤) 96.47% 달성

* 조기폐광 합의의 차질없는 진행과 안정적인 석·연탄 수급관리
(I-5-③, 석탄산업과)
: 조기폐광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개) 60.00% 달성

*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II-2-②, 지역경제진흥과)
: 보조금 수혜기업의 고용효과(명) 98.09% 달성

* 성장지향형 중견기업 지원정책 기반 강화(II-3-①, 중견기업정책과)
: 중견기업 수출 기업 수(개) 87.04% 달성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V-1-①,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 수출애로 후속조치로 바이어 교신 지원실적(건수) 87.77% 달성

*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 기반구축(V-2-②, 해외투자과)
: 유턴기업 현장 방문 점검 기업수 75.00% 달성

*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적 기반 강화
(V-5-①, 정책기획팀, 혁신지원팀, 서비스투자지원팀, 개발투자지원팀)
: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개) 99.46% 달성

○ 최근 3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23년도 108.32%, 24년도 108.55%, 25년도 109.47%로, 소폭이나 지속 증가 추세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108.32%	108.55%	109.47%
총성과지표 개수	209개	212개	179개
총성과관리 과제수	83개	83개	68개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관련 계획 진행 中, 정책기조 전환, 주요국 공급망 재편,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외부·구조적 요인과 함께 스마트화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만대)	415	408	98.31%	(자동차 생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5.1~10월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3,385,506대로 전년동기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목표치 대비 국내자동차생대수 감소원인은 관세 영향으로 인한 대미 수출감소, 미국 전기차공장 건설 등 현지 생산 증가, 완성차업체 파업 등에서 기인
자동차 R&D 사업 사업화 성공률(%)	40.9	38.5	94.13%	-
전세계 발주 중 한국 고부가선박 수주 비중(%)	49.3	48.2	97.77%	25년 전세계 발주량은 급감하였으나, 이미 3~4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소는 제한된 도크를 수익성이 높은 LNG선, VLAC 등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
이차전지 기술개발 분야 SMART 점수 (점)	3.9	3.7	94.87%	-
이차전지 수출량 (100Ton)	3,139	2,997	95.48%	美 대선결과에 따른 급격한 정책기조 전환 및 통상환경의 변화, 그리고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된 전기차 캐즘의 영향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배터리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수출량 역시 감소하였음
바이오헬스산업수출 액 (억불)	164	160	97.56%	최근 주요 수출국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 및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의 어려운 대외 여건*이 발생 * 예: 차기 행정부 출범 관련 통상 정책 변화 예고, 주요국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LPG 연료비 절감율* (%)	33.4	30.7	91.92%	-
천연가스 주배관망 및 도외자 배관 확 충 (km)	5,658	5,190	91.73%	-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국산 무연탄 비축실적(천톤)	85	82	96.47%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조기폐광이 완료('25.6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부담 감소를 위해, 일부 기능을 타기관에 업무 이관 추진 ⇒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25.9월) - 업무 이관준비에 따라, 품질조사 및 자산 실사 등 인수인계 절차로 인해 무연탄 비축 관련 실적이 다소 미비함
조기폐광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개)	2	2	60.00%	-
보조금 수혜기업의 고용효과(명)	3,187	3,126	98.09%	(지방투자) 공장 스마트화·자동화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노동 수요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신규고용에 대한 목표달성에 어려움 증가. 또한 경제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부재하여 보조금 신청이 줄었고, 그에 따라 전체 고용실적 또한 감소 * ① 대외적 사유 :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투자환경 불확실성 증가 및 중국 등 주요 수출국 경기 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 ② 투자비용 증가 :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설비 등 비용 증가로 보수적 투자 ③ 특정 산업군 부진 :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의 캐즘으로 국내 설비투자 지연
수출애로 상담(건수)	39,305	35,689	90.80%	-
수출애로 후속조치로 바이어 교신 지원실적(건수)	2,314	2,031	87.77%	-
유턴기업 현장 방문 점검 기업수	20	15	75.00%	-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개)	8,637	8,590	99.46%	-

(2) 주요성과

- ◇ ‘차세대 핵심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I-4-①)’ 등 14개 과제(1등급 4, 2등급 10)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정책영향 발생도가 높은 점 등이 우수한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2등급 이상 과제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범정부적 지원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등을 바탕으로 소부장 기업의 매출액 상승, 생산설비 투자, 글로벌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 등 소부장 기업성장 가시화
 - * (관리과제 I-2-①, 2등급)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한-미 조선협력, 일명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기회 창출
 - * (관리과제 I-3-③, 1등급)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기반 강화
-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및 AI반도체 시장 선점, 소재·공정·패키징 분야 기술격차 심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확대
 - * (관리과제 I-4-①, 1등급) 차세대 핵심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 OLED 초격차 확보·차세대(iLED) 기술선점 및 민간투자 촉진, 가전 AX 전환을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 지원
 - * (관리과제 I-4-⑤, 2등급) 미래 디스플레이·가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中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산업 환경변화 대응 등 中堅 지원체계 개편
 - * (관리과제 II-3-①, 2등급) 성장지향형 중견기업 지원정책 기반 강화
- 11월 14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로 자동차·부품 관세 15% 인하 합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및 산업계 예측가능성 제고
 - * (관리과제 III-1-①, 2등급) 산업계와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통상 연계

- 11월 14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및 전략적 투자 MOU 서명 등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 * (관리과제 III-1-②, 2등급) 북미지역 통상·산업·에너지 협력강화 및 한미 FTA의 안정적 이행
- 중앙아 협력채널 가동으로 플랜트·희소금속·핵심광물 등 경제외교 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終戰 대비 양자 경제협력 복원 기반 마련
 - * (관리과제 III-2-①, 2등급) 신북방 국가 통상현안대응 및 국내기업 신흥시장 진출기반 조성
- 역내 (소)다자 체제 및 비즈니스 행사 등을 활용하여, 공조 메커니즘 가동 및 협력 분야 발굴
 - * (관리과제 III-2-②, 1등급)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현안 대응 및 협력강화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타결('25.3월), 제2차 한-싱 디지털경제대화 개최('25.8월) 등 주요 파트너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기반 강화
 - * (관리과제 III-3-②, 2등급) 디지털 통상 규범 선도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로 아세안 통상네트워크 확대, 한-영 FTA 개선 협상으로 영국과의 통상관계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탄소중립 협력
 - * (관리과제 IV-1-②, 2등급) (협상)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상 전개
- 트럼프 2기 출범 후 철강·알루미늄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 보호무역 조치 강화·확산에 대비, 전방위·전주기적 대응 태세 마련
 - * (관리과제 IV-2-①, 1등급)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 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인 행사 성공 개최 → K-기업 위상 제고 및 국가적 성과 창출
 - * (관리과제 IV-2-②, 2등급) 다자통상 현안 대응 및 협상·협력 강화
- 덤핑 조사신청 증가, 우회덤핑 등 국내산업 피해 적기 대응을 위해 무역위 조직 확대 개편('25.3월), 「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25.6월)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 공고화
 - * (관리과제 V-4-①, 2등급) 선진무역구제기관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3) 개선·보완 사항

◇ ‘조기폐광 합의의 차질없는 진행과 안정적인 석·연탄 수급관리 (I-5-③)’ 등 14개 과제(6등급 10, 7등급 4)는 성과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됨

□ 6등급 이하 과제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제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인재 확보, 제조 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등에 대한 성과 지표가 부재, 이로 인해 과제 전반의 성과가 제한적인 결과로 나타남

* (관리과제 I-1-③, 6등급) 첨단·주력산업 우수인재 양성

- 목표의 적극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투입 예산 및 정책 수요자(예시: 기업 등)에 대한 여건 분석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관리과제 I-2-②, 6등급) 소재·부품·장비 튼튼한 협력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금년도 초 계획 수립시 현장의견 수렴이나 전년도 정책분석 결과를 반영한 부분이 미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계획 집행단계의 구체적 실적이 미흡

* (관리과제 I-4-③, 6등급) 바이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LPG 연료비 절감률 성과 지표에서 3년 평균치인 성과지표를 미달성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

* (관리과제 I-5-②, 6등급) 안정적인 가스 수급 기반 확충

- 조기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마련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보완, 집행, 상황대응 및 정책환류가 중요.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 개발·설정 및 관리 필요

* (관리과제 I-5-③, 7등급) 조기폐광 합의의 차질없는 진행과 안정적인 석·연탄 수급관리

- 자원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국내 대응 역량 수준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 제안될 필요가 있음
 - * (관리과제 I-5-⑤, 7등급) 자원안보 위기 대응역량 강화
- 지원활동과 기업의 매출총액 등과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표 개선 등이 요구됨
 - * (관리과제 II-3-③, 6등급)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대규모 쇼핑행사 개최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수립되어 관리과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성과지표 구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제고 필요
 - * (관리과제 IV-2-③, 7등급) 무역협정상 법적 이슈 대응
- '유턴기업 현장방문 점검기업수'는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에 도 행정력 측면에서 어려우며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최근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유턴기업 지원 제도/법령 추진과 같은 정성적 지표를 성과지표로 반영할 필요도 있어 보임
 - * (관리과제 V-2-②, 7등급)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 기반구축
- 다수의 위원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 현장과 밀접한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제도 개선 등에 연계되는 상호 연계성있는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과지표가 성장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 권장
 - * (관리과제 V-5-①, 6등급)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적 기반 강화
- 교육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목표 구체화와 이에 부합하는 커리큘럼 고도화가 필요하며, 성과평가 또한 참가자 수 중심의 양적 지표를 넘어 각 양성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 배출 여부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관리과제 VI-1-②, 6등급) 표준 전문 인력양성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강화
- 성과지표 모두 최종 결과라기보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지원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를 지님. 따라서 향후 보다 최종성과를 직접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보완도 필요
 - * (관리과제 VI-3-①, 6등급)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사업화 지원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 처리는 상시적 관리 성격이 강해 성과 지표로 적절치 않으며, '측정기기 관리'에서 '측정 관리'로의 시스템 전환, 산업계량의 중요도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성과관리에 반영필요

* (관리과제 VI-3-②, 6등급) 상거래 신뢰성 강화 및 계량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규제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영향 평가 등의 활동은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표치를 지난 2년 실적 대비 낮게 설정한 점은 대내외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관리과제 VI-4-②, 6등급)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규제합리화

- '25년 내 이행하지 못한 계획에 대해서는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확인·조치하고, 계획 대비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I-1-1. 산업 혁신성장 성과확산 기반 마련	4등급
I-1-2. 산업AI 활용 확산	3등급
I-1-3. 첨단·주력산업 우수인재 양성	6등급
I-1-4. 산업 성장 지향형 그린전환 추진	4등급
I-2-1.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2등급
I-2-2. 소재·부품·장비 튼튼한 협력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6등급
I-2-3. 철강·세라믹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4등급
I-2-4. 화학산업 기반조성 지원 및 규제 해소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4등급
I-3-1. 기술·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계·로봇·방위산업의 구조 고도화 추진	3등급
I-3-2.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산업경쟁력 제고	3등급
I-3-3.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기반 강화	1등급
I-3-4. 엔지니어링·디자인 역량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5등급
I-4-1. 차세대 핵심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1등급
I-4-2. 안정적인 국내 배터리 생태계 조성	3등급
I-4-3. 바이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6등급
I-4-4.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 및 차세대 탄소·나노 산업 육성	5등급
I-4-5. 미래 디스플레이·가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	2등급
I-5-1. 석유수급의 안정화·효율화 기반 마련	5등급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I-5-2. 안정적인 가스 수급 기반 확충	6등급
I-5-3. 조기폐광 합의의 차질없는 진행과 안정적인 석·연탄 수급관리	7등급
I-5-4.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반 확충	4등급
I-5-5. 자원안보 위기 대응역량 강화	7등급
II-1-1. 압도적 기술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지원	5등급
II-1-2. 미래 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도전혁신적 R&D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성 강화	4등급
II-1-3. 파급력 있는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5등급
II-2-1. 5극3특 균형성장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4등급
II-2-2.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5등급
II-2-3.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RE100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3등급
II-3-1. 성장지향형 중견기업 지원정책 기반 강화	2등급
II-3-2. 중견기업 R&D 지원기반 확충	4등급
II-3-3.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대규모 쇼핑행사 개최	6등급
III-1-1. 산업계와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통상 연계	2등급
III-1-2. 북미지역 통상·산업·에너지 협력강화 및 한미 FTA의 안정적 이행	2등급
III-1-3. 중남미·대양주 국가와 통상 협력강화 및 수출확대 기반 조성	4등급
III-1-4. 유럽과의 전략적 경험 강화, 한-EU FTA 이행 및 통상현안 대응	5등급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III-2-1. 신북방 국가 통상현안대응 및 국내기업 신흥시장 진출기반 조성	2등급
III-2-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현안 대응 및 협력강화	1등급
III-2-3. 동남아·서남아 지역 국가와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통상협력 추진으로 시장진출 경쟁력 제고	4등급
III-2-4. 중동·아프리카 국가와의 전략적 경험 활성화	4등급
III-3-1. 새로운 통상 이슈 대응·정책수립 및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조성	5등급
III-3-2. 디지털 통상 규범 선도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2등급
III-3-3. 긴밀한 국내소통을 기반으로 기후에너지 규범 논의 선제 대응	3등급
IV-1-1. (신규) 신규 통상협정 여건 조성 및 협상 개시 추진	4등급
IV-1-2. (협상)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상 전개	2등급
IV-1-3. (이행) 통상협정의 체계적 이행관리 및 규범 현대화 추진	4등급
IV-1-4. (활용) FTA 활용 촉진 지원 및 FTA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3등급
IV-2-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1등급
IV-2-2. 다자통상 현안 대응 및 협상·협력 강화	2등급
IV-2-3. 무역협정상 법적 이슈 대응	7등급
V-1-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강화	4등급
V-1-2.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3등급
V-2-1.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4등급
V-2-2.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 기반구축	7등급
V-3-1.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대외 수출통제 적시 대응	4등급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V-3-2. 산업기술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	3등급
V-4-1. 선진무역구제기관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2등급
V-4-2.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산업피해 및 덤핑조사 강화	4등급
V-4-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이행 기능 강화	4등급
V-5-1.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구조적 기반 강화	6등급
V-6-1. 원전 산업 해외 진출 지원	3등급
VI-1-1. 민간주도 표준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신산업 및 지속가능 사회 관련 표준화 추진	4등급
VI-1-2. 표준 전문 인력양성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강화	6등급
VI-2-1.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기능 강화	5등급
VI-2-2.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안전기준 정비	4등급
VI-3-1.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사업화 지원	6등급
VI-3-2. 상거래 신뢰성 강화 및 계량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6등급
VI-4-1.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통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강화	5등급
VI-4-2.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규제합리화	6등급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I-1-①

산업 혁신성장 성과확산 기반 마련

4등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관협력 강화) 경제 6단체장 간담회 및 산업정책 민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집행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목표 18건 대비 19건을 달성(105.6%)하여 소통 체계 확립
- (선제적 사업재편)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581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2.4만 명의 신규 고용과 39.8조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
- (투자 활성화) 41건(11.7조 원 규모)의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이중 16건(4.5조 원 규모)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
- (ESG 경영 확산) 조선업종 특화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종별 맞춤형 대응을 지원
- (첨단산업 기반) 12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 2,048억 원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휴머노이드와 첨단항공엔진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여 미래성장동력 확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계획 수립 시 수행한 실태조사 등이 실제 계획의 어떠한 측면에 기여했는지 불분명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시한 성과지표의 측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 정도로 평가되어 조금 더 적극적인 설정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부내 생산 통계 및 전문용역, 주요 기업 협단체 의견수렴을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노력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등은 이루어졌으나, 명시적인 분석이 미흡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인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반영이 부족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이행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기준 제시가 미흡하며, 목표치가 전년 대비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새로운 성과지표 도입으로 정책별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갖추었으나 '전문가 집단의 ISTANS 사업평가'에 대한 목표치 설정근거에 보완이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5.51%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국정과제에 기여하며, 다수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과 국회 등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6-②정책환류	중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 환류가 이루어짐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2
	7-3(2점)	0.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 로드맵) 「산업AI 확산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및 제조 AX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산업계 AI 활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담보
- (민간주도 협력) 1,000여 개의 제조기업,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 「M.AX 얼라이언스」를 2025년 9월 출범시켜 2030년까지 100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
- (법제도 혁신) 기존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전면 개정(2025.12)하여 지원 범위를 단순 디지털 전환(DX)에서 인공지능 (AI) 활용까지 확대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
- (전문인력 양성) DX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통해 202명의 이수자를 배출(목표 200명 대비 101%)하고, 산업데이터 및 AI 제조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86명을 양성하여 현장 수요에 대응
- (국제 표준 선도)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2025.10) 및 제3회 산업 AI 국제인증포럼(2025.9)을 개최하여 글로벌 데이터 표준 및 인증 체계 구축을 주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단순 산출지표 설정으로,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산업 AX에 대한 전략적 목표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기초한 과제 추진과 성과 피드백이 필요
-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차별적이고 대표성을 갖는 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 및 이행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AI기업, 유관기관, 전문가집단, 학계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산업 AI 확산 SWOT 분석과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분석의 적절성이 뛰어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별도의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기업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회의체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을 모니터링 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제시한 성과지표 3개가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평가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과 구체성에서 '참가자 수'만으로는 타당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output 아닌 outcome 지표 추가 발굴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3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국정과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산업 AI 기술 개발 및 확산에 기여함
6-②정책환류	상	금년도 과제 추진에 대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적시하였으며,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방향을 설정하였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1.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급인재 양성) 산업별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1,527명을 배출하여 목표(1,485명) 대비 102.8%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반도체(357명), 이차전지(125명) 등 첨단 분야에 집중
- (법적 기반 구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시행(2025.1.17)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 센터를 개소하여 체계적인 인재 육성 및 유치 기반 마련
- (특성화대학원) 반도체, 이차전지 등 4대 첨단 분야 14개 대학원을 지원 중이며, 2025년에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에 3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전문 교육 인프라 확충
- (글로벌 교류)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 517명을 선발하여 미국 우수 대학에 파견하고, K-Tech Pass 도입 및 해외 연계 연구(120명)를 통해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 (산학협력 고도화)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315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생과 기업이 함께하는 산학 프로젝트 530개 팀을 지원하여 실무형 R&D 역량을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시행→정책성과→정책영향 전반에 걸쳐 정책활동이 명확하게 연계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글로벌 인재 확보, 제조 안전 얼라이언스 확대 등에 대한 성과 지표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과제 전반의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 첨단/주력산업 범주를 명확히 하여 통계와 목표에 따른 실적 산정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수립이 이루어짐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전년도 사업 등을 24년 및 금년 초기에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금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계획수립의 적절성이 우수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라 첨단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효과성 측정지표가 강화되었어야 하나,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하였으나,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및 문제해결은 미흡함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목표치가 전년대비 하향 조정됨. 취업자 역량 비교우위의 연도별 편차가 심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기반하여 목표치 설정할 필요가 있음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중 석박사 배출 인원수'에 대해 사업목표 관련하여 대표성, 인과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질적지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이행 조치가 없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1.06%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이 미흡함
6-② 정책환류	하	해당년도 분석내용에 대한 차년도 반영계획이 뚜렷하지 않음
7-가점 항목	7-1(±2점)	0.6
	7-2(2점)	1
	7-3(2점)	0.6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NDC 수립)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산업부문 2035 국가온실 가스감축목표(NDC)' 수립
- (CFE 이니셔티브) 무탄소에너지(CFE)의 포괄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CEBA, 국제기구 SE4ALL 등과 MOU를 체결하고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금융·재정 지원)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2,150억 원의 용자를 지원하여 1조 1,478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발하였으며, 4개 컨소시엄을 선도플랜트로 선정하여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정부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 174.4천 tCO₂를 달성하여 목표(151.2천tCO₂) 대비 116%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섬유기업 21개사에 탄소저감 설비 구축
- (순환경제 활성화) 폐자원 활용 등 순환경제 분야 신사업 7건을 발굴·사업화하여 목표 대비 116%를 달성하고, '자원생산성지표'를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디지털 탄소관리) EU 등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DPP(디지털 제품여권)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착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정책분석과 대비책 수립 간의 연결성이 모호하고, 정책 집행의 모니터링 및 상황 대응이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금년도 정책집행 내용에 대한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차년도 정책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한 환류 노력이나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산업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이행 등에 대한 다양한 조사분석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SWOT 분석은 2021~2023년 사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내용과 대비책이 연계되지 않음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물질흐름 통계 활용도에 대한 새로운 지표로의 전환 지적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모호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정책집행의 모니터링이나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졌으나 횡수나 내용면에서 다소 부족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성과지표 전반적으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5.42%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되거나, RE100 산단 규제 특례 방안 등이 정책으로 수용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등 정책효과가 우수함
6-②정책환류	하	과제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과 차년도 반영 계획이 미흡함
7-가점 항목	7-1(±2점)	0.6
	7-2(2점)	1
	7-3(2점)	0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급망 안정화) 범부처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징후 조기 파악을 위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200여 개로 개편하여 관리 체계 고도화
- (투자 지원 강화)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을 위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2025년 700억 원)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
- (R&D 성과) 소부장 R&D 예산을 2.28조 원으로 확대하여 사업화 매출 11.1조 원, 민간투자 4.5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일(對日) 100대 핵심품목 의존도를 20.2%까지 낮춤
- (으뜸기업 육성)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선정 기업들의 매출액이 선정 전 24.0조 원에서 선정 후 26.1조 원으로 증가하는 성장세를 시현
- (뿌리산업 고도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299개 기업에 혜택을 제공(목표 대비 130%)하고, AI 기반 지능형 공정 시스템 구축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공정 혁신을 촉진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일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본 사업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성과 지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소부장 산업의 각종 통계 분석이나 실태 조사 등이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이루어졌음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지난 소부장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년도 계획 수립(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시 반영하는 등 계획수립이 우수하게 이루어짐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에 권고한 특정국 의존도 관리에 관한 성과지표 설정 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
2. 추진일정의 충실성	95.45%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정책집행의 모니터링, 여건변화에 대한 대처와 문제해결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적절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소부장 공급망 확충에 관한 성과지표 선정이 적절하며, 실적이 우수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8.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소부장 관련 정책효과가 명확히 나타남
6-②정책환류	중	금년도 정책분석 결과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됨
7-가점 항목	7-1(±2점)	0.6
	7-2(2점)	1.8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특화단지 고도화) 2기 소부장 특화단지 5곳에 대한 전용공간 건축 및 장비 도입을 본격화하고, 2030년까지의 중장기 육 성 전략인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 (실증 인프라)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검증을 위해 2028년까지 159종의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 착수
- (기업 기술지원) 441개 기업에 신뢰성 평가 바우처를 제공하고,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6,731개 기업의 기술 애로 18,226건을 해결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 (디지털 전환) 가상공학 플랫폼을 활용해 부품 시뮬레이션 1,029건을 지원하고, 소재 데이터 520만 건을 축적하여 소부장 개발의 디지털화 촉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단계적 정책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이 미흡하며, 각 항목 간 연결성이 다소 모호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단점, SWOT 등 정책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소부장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시 연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뿐만 아니라 산학연 전문가 등 보다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수집할 필요
- 투입예산 및 정책 수요자에 대한 여건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공과 실패요인 등의 분석을 통한 정책환류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단순 나열만 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 효과분석 및 장단점 분석과 그에 기반한 대비책 수립이 미흡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짐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단순한 통계 수집에 불과하고, 계획에 대한 일정 추진이 일부 미흡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목표치를 전년대비 5%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소부장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은 우수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5.3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상위목표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및 기여여부에 대한 실적 제시가 모호하고, 무의미한 보도내용만 기재됨
6-②정책환류	하	성공과 실패 요인분석이 없고, 차년도 반영계획도 제시하지 않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4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적 기반 마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2025.11)하여 저탄소 철강 생산 전환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
- (대형 R&D 추진) 총 8,146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6년 부터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 실증에 착수
- (금융 안전망) 철강 업계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5,7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
- (희소금속 공급망) 희소금속 수급 안정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수급 분석 시스템 구축 시기를 2029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정보역량을 강화
- (세라믹·시멘트) 세라믹 소재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멘트 산업의 석회석 원료 대체율 목표(3%)를 초과한 5%를 달성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에 따른 정책효과 및 정책환류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재의 성과지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 목표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성과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정책 환경 및 장단점 분석 등 여건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의 영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자료 제시가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관련 통계현황과 사례분석 등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철강, 비철, 희속금속, 세라믹, 시멘트 등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정책분석과 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이루어짐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충분한 설명이 미비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미 관세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한 대처와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짐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의 실현 정도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움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인관성, 구체성이 미흡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8.00%	
6-①정책효과 발생 정도	하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과가 명확하지 않음
6-②정책환류	하	정책 성공 및 미흡 요인 분석이 미비하며, 차년도 반영계획이 다소 모호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0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산업 구조개편) 범부처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대응책을 마련(2025.8) 하고, 민관 소통을 통해 사업재편 첫 사례를 로드맵 대비 1개월 조기에 도출하는 성과 거둠
-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5.12)하여 설비 합리화,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세 제·재정 지원 및 공정거래법 특례 근거 마련
- (요소 수급 다변화) 차량용 요소의 중국 외 제3국 수입 시 단가 차액 보조율을 50%에서 90%로 대폭 상향하여 이집트 등 신규 수입선을 성공적으로 확보
- (온실가스 감축)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해 HFC 물질의 전환 일정을 구체화하여 공고(2025.12)하고, 쿼터제 운영을 통해 감축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성과가 과제의 정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본질적 사업과의 연관성이 다소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부 성과지표는 단년도에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 위기 극복 등 정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구체적 수치를 성과지표로 제시)
- 정책 여건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정책 및 법안 마련이 적절히 수행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른 성과지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본질적 사업과의 관련성이 다소 낮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과제별 계획 대비 일정 추진이 미흡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석유화학 산업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석유화학업계 자율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법제 마련 등 국정과제와 일부 연계되어 간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하	이해관계자, 산업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차년도 반영계획은 명확하지 않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8
	7-3(2점)	0.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조 AX 가속화) 10개 분야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2025.9)하고, 25건의 AI 팩토리 R&D 선도사업에 착수하여 제조 현장의 AI 전환 가속화
- (로봇 생태계) AI와 로봇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60개 기관이 참여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시키고, 관련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목표 대비 205% 달성 성과 기록
- (핵심부품 국산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작기계용 CNC 제어시스템 (TENUX)의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실증 단계 진입
- (방산 혁신)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대규모 R&D 예타를 추진하였으며,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개소이래 최대인 5.56억 불 규모의 G2G 수출 계약 성사
- (R&D 효율성) 기계·로봇 분야 R&D 사업화 성공률 47.9%(추정)를 달성하여 목표(43.5%)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입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I 전환 시대 중요한 정책과제로, 기계·로봇·방위산업에 특화된 AI 정책 발굴 및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
- 제조 AX를 향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목표 설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있어 대내외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공격적 목표 설정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연중/수시 실태조사와 동향분석 등 사례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짐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기계 로봇 산업과 방산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및 이행을 면밀히 추진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등)에 대한 개선이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상황변화 대처의 적시성과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짐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과거 실적 대비 목표치가 적극적이지 못함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참여기관 수 등의 성과지표는 정책 성과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6.00%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국정과제와의 연계가 두드러지며,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6-② 정책환류	중	차년도 반영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짐
7-가점 항목	7-1(±2점)	1.4
	7-2(2점)	2
	7-3(2점)	0.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출·생산 호조) 2025년 10월 누적 기준 자동차 수출 59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였으며, 3년 연속 연간 생산량 400만대 돌파 확실히
- (전략적 대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美 관세 대응 긴급대책',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등 시의적절 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여 대내외 리스크 대응
- (금융 안전망) 친환경차 시설투자 대출 지원을 3,155억 원으로 확대하고,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부품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확보
-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분야 R&D 예산을 4,326억 원으로 증액하여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 748명을 양성하여 목표 대비 183%의 성과 거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과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및 구체성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공적 구조 전환을 대표할만한 지표를 개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과제 목표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하였으나, 장단점 분석, 성공 및 미흡요인 분석 등 근거로 진행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표 성과지표 개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자동차 산업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시 적절히 반영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정책의 효과 분석, 장/단점 분석이 잘 이루어졌으며, 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우수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에 따라 신규지표를 발굴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과제별 계획 대비 일정이 충실히 준수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신규지표를 적극 도입하였으나 목표치에 대한 적극적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국가 정책의 성과지표로서 대표성 및 구체성이 부족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3.56%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미래차 전환 대책, 통상 대응 등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중	차년도 반영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짐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4
	7-3(2점)	0.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미 협력) 한-미 조선협력(MASGA 프로젝트)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에 기여하고,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 (수주·수출 성과) 3~4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3,530만 CGT의 수주 잔량을 확보하였으며, 연간 수출액이 8년 만에 300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인력·기술)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산인력을 10만 명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역대 최대 규모인 2,600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하여 초격차 기술 확보에 주력
- (미래 선박)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기술 선점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선박 수주 비중 48.2%(LNG선 90% 독점)를 기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의 달성 수준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래 조선으로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목표 설정에 있어 적극성이 다소 부족한 편으로, 고부가 선박 비중의 경우 우리 조선 경쟁력의 핵심 지표인만큼 보다 적극적 목표치 설정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관련 통계현황 및 의견수렴을 충분히 진행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정책 반영을 검토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정책분석 내용이 계획 반영에 충실히 반영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별도의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한미 조선협력, 비자제도 개선 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매우 우수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이뤄지지 못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이 매우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1%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MASGA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중	차년도 반영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짐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8
	7-3(2점)	0.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자인 위상 제고) '디자인의 날(11.2)'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선포하고, 2027년 세계디자인기구(WDO) 총회 유치 및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선정 쾌거
- (글로벌 진출) 유망 디자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102개사로 확대하고, 에듀테크 기업 110개사를 지원하여 80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
- (엔지니어링 공정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을 제·개정하여 제값 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산업 공정성 강화의 법적 토대 마련
- (사업화 성과) 지식서비스 R&D 사업화 매출액이 목표 대비 217%(6.44억 원), 디자인 R&D 매출액이 154%(7.65억 원)를 달성하여 높은 재정 투입 효율 입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 단계의 분석 깊이와 시행 과정에서의 기민한 대응이 충분치 않았으며, 성과 목표치 또한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의 현재 상황을 심도 깊게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
- 장단점 및 과거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수립, 정책환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발굴된 성과지표가 정책과제의 대표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목표치 산정을 통해 정책과제 추진 의지를 보다 명확히 표명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통계현황이나 의견수렴은 적절히 이뤄졌으나, 정책반영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움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효과 분석결과 도출된 내용에 대한 대비책은 수립하였으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이 부재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과제별 계획 대비 일정 추진이 미흡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근거가 사업예산에 좌우되는 구조이며, 목표치 산정이 적극적 설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대부분의 지표가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산업 정책의 결과를 대변하는 성과지표로 이루어짐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3.23%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성과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품질 제고 노력도	중	차년도 반영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짐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1.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메가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착공(2025.2)하였으며, 1조 원 규모의 소부장 실증 팹(트리니티 팹) 건설에 착수하여 생태계 기반 완성
- (규제 및 지원)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R&D 인력 대상 특별 연장근로 한도를 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투자 촉진
- (초격차 R&D) 총 9,973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기술 우위 확보
- (인재 및 협력)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6대 반도체 생산국 회의(GAMS)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 발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측면에서 메모리, 비메모리 분야 산업 성장을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검토할 필요. 예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 혹은 생산액 등 메모리 분야에 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직관적 지표 도입으로 정책 목표를 보다 선명하게 설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통계현황 및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정책반영을 위한 검토 또한 진행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을 적절하게 마련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지표 3개를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각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대처 및 해결이 연계되어 충실하게 추진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에 대한 대표성과 인과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3.69%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정책효과가 우수함
6-②정책환류	상	전년도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에 충실히 반영함
7-가점 항목	7-1(±2점)	2
	7-2(2점)	1.4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주기 생태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을 발의하여 순환경제 기틀을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10조 원으로 확대하여 자원 안보 강화
- (차세대 기술)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1,824억 원을 투입하고, LFP 및 나트륨이온전지 등 보급형 배터리 기술 확보를 위한 R&D 다각화
- (생산능력 확대)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을 7.9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업 투자를 지원한 결과, 글로벌 생산능력 691.3GWh를 확보하여 목표를 106.4% 초과 달성
- (통상 대응) 미국 IRA 대응을 통해 배터리 3사가 약 2.1조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지원하고, 배터리 아카데미를 통해 1,33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결과와 계획 수립 간의 연결성이 다소 미흡하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 현안이자 정책 목표인 국내 산업 생태계, 즉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수출로 일부 대표할 수 있으나, 이는 배터리 셀 기준으로 배터리 소부장의 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화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만 반영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설명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금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분석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 존재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에 자체평가에서 의견을 제시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로의 개선 부분에 대한 반영사항 미흡
2. 추진일정의 충실성	95.45%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과제별 계획 대비 일정이 비교적 충실히 준수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4개의 성과지표 모두 전년 실적치 대비 상향한 목표치 설정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들의 대표성, 인과성 및 구체성이 매우 우수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1.45%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정책효과가 적절히 발현됨
6-②정책환류	중	전년도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에 적절히 반영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8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도약 전략)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하여 범부처 지원 체계 가동
- (R&D 및 투자) 9,400억 원 규모의 첨단 의료기기 R&D 예타를 통과시키고, 국내외 투자유치 7건을 성사시켜 목표(6건)를 초과 달성
- (글로벌 성과) 수출액이 팬데믹 수준에 근접한 1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R 행사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이전을 활성화
- (인프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K-NIBRT)를 개소하여 연간 2,000명 규모의 실무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로봇 기반의 의약품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 착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단계적 정책활동 중 시행과정을 제외한 계획 수립, 정책 성과, 정책 영향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금년도 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년도 정책 분석 결과의 반영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계획 집행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실적 제시 필요
- 정책환류 등 결과를 단순 나열하기 보다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 필요
- 바이오산업의 핵심 취약 요인인 바이오 소부장 생태계 및 전문인력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접근 및 성과지표 개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통계현황,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었지만 정책반영과의 연결성이 다소 모호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을 적절하게 마련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과제별 계획 대비 일정이 준수하게 추진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표치 또한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못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및 구체성은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36%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 발현이 미흡함
6-②정책환류	하	환류개선을 제시하였으나, 부분적이며, 그 외 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계획이 미흡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섬유산업 고도화) '산업용섬유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목표를 상회하는 717억 원의 매출 성과 창출
- (탄소 복합재)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운영 및 1.76조 원의 정책 금융 공급을 통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
- (나노 기술) '나노코리아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노 분야 R&D 특허의 질적 우수성(SMART 지수 3.8점)을 확보
- (친환경 전환) 바이오매스 및 폐섬유 재생 기술 등 44개 과제에 342억 원을 지원하여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상황변화에 대한 기민하고 충실한 대처가 충분치 않았으며, 정책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산 규모가 축소된 만큼, 그간의 정책 성과에 대한 객관적, 심층적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에서 기업지원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 매출액 지표의 경우, 정책 지원 효과와 기업 자체 성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지표로서의 타당성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수준을 명확히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사전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분야별 대비책을 수립하여 제시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지적사항인 정책환류 미흡 부분을 산업별로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우수하게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대처의 적시성, 문제해결 등 대응성이 단편적이고 지엽적임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의 다수가 정부 예산 규모에 연동되어 있어 금년도 목표치 설정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인과성, 구체성 등이 다소 모호하여, 개선이 필요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1.39%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정책효과가 적절히 발현됨
6-②정책품질 제고 노력도	상	정책환류에 대한 노력이 우수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스플레이 초격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 개발에 4,840억 원 투입을 확정하고, OLED 첨단기술개발사업 예 타 기획을 완료하여 차세대 기술 우위 확보
- (인프라 및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OLED 혁신공정센터를 개소 (2025.4)하고, LGD 광저우 공장 매각 승인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국내 투자 유도
- (가전 AX) 가전 산업의 AI 전환을 위해 「AI가전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표준화 및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가전 기업의 제조 혁신 지원
- (성과지표) 디스플레이 인프라 활용 매출액(102%) 및 전자제품 제조 지원 실적(110%) 등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재 지표는 개별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 성과지표 발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이 충실히 이행되었고 정책반영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의 장단점 분석 및 보완 대책이 적절히 수립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지적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수하게 대응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적 대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이 매우 충실하게 추진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기업의 활동, 지원실적 등의 변화를 예측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타 산업 분야 성과지표 사례를 참고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6.14%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정책효과가 적절히 발현됨
6-②정책품질 제고 노력도	상	과제의 보완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차년도 반영계획이 명료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비축 역량 강화) 비축유 누적 1억 배럴을 확보하여 IEA 기준 비축 지속일수 117일을 달성하였으며, 비축계획 달성률 100.3%를 기록하여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함
- (위기 대응)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9차례에 걸쳐 740만 배럴을 긴급 대여하여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상시 점검 체계 가동
- (민생 안정) 알뜰주유소를 1,307개소로 확대하고 수도권에 26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유가 안정화를 유도하였으며, 비알뜰 주유소 대비 리터당 약 29원의 인하 효과 거둠
- (유통 투명성) 가짜석유 및 품질 부적합 제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여 석유 유통 시장의 건전성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계획 수립의 과정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석유사업자 건전성 확보’ 성과지표의 경우, 25년 실적치가 27년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한 상황으로, 성과목표 수준에 대한 재검토 또는 대체 성과지표 제시가 필요
- 주요 과제 목표 중 하나인 석유 유통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하여 알뜰 주유소 확대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예.정유 4사 대비 가격 격차 등)를 검토할 필요
- 전년도 지적사항과 같이 장기적인 석유 수요 감소 추세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 방향 구체화 및 성과지표 체계에도 단계적 반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은 이뤄졌으나, 정책과의 연결성이 미흡함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이 없으며 분석결과가 금년도 계획 수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과제별 계획 대비 일정이 준수하게 추진됨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년 실적치와 동등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함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대체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및 구체성이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6.01%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석유 수급 안정 등 일부 정책효과를 달성함
6-② 정책환류	상	정책환류에 대한 노력이 우수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도입선 다변화) 중동산 가스 비중을 19.5%로 대폭 축소하고, 한-미 장기 도입 계약 및 캐나다산 LNG 최초 도입을 통해 공급선을 획기적으로 다변화
- (인프라 확충) 천연가스 저장용량 1,512만㎥를 확보하고 주배관망을 5,286km로 확장하여 공급 안정성을 높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2,050만 가구 목표를 100% 달성
-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 동절기 요금감면 한도를 월 14.8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연료비 부담 완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각 단계별 정책분석 활동과 개선 및 환류 과정의 연결성이 다소 미흡하며,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LPG 연료비 절감률 성과지표의 경우 3년 평균 기준 성과를 미달성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도시가스 및 LPG의 안정적 공급과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지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스마트미터 보급, 가스안전, 배관망 관리 등)
- 평가보고서에 명기한 바와 같이, 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을 근거로 한 대비책 수립이 미흡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 중 LPG 연료비 절감률 지표 재검토에 대한 이행 여부가 모호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3개의 성과지표 모두 전년도 실적치와 유사하거나 하향 조정된 수준으로, 목표치 선정이 소극적임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안정적 가스 수급 정책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4.68%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도시가스, LPG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의 정책효과가 적절히 발현됨
6-②정책환류	하	차년도 반영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과제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이 미흡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0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조기폐광 완료) 국내 마지막 공영 탄광인 도계광업소 폐광(2025.6)을 완료하고, 관련 근로자 구조조정 및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
- (지역경제 회생) 총 1조 722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 화순, 태백, 삼척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급 및 가격안정) 무연탄 비축 목표를 달성하고, 서민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탄 및 연탄의 고시가격을 동결하였으며, 연탄쿠폰 지원액을 15.7% 인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단계적 정책활동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적인 국회 대응 및 예타 대응으로 과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폐광지역 경제 진흥사업계획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제시가 필요
-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보완, 집행, 상황대응 및 정책환류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지표 발굴 필요
- 충실한 자료 작성이 요구되며, 사전조사, 과제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은 진행하였지만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실적이 미흡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분석 내용이 계획 반영에 적절히 반영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과제별 계획 대비 일정이 대부분 준수하게 추진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비축탄 유지율 목표치가 과거 실적치가 동일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요구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목표와의 인과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87.2%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 발생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음
6-②정책환류	하	과제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비축 확대)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핵심광물 비축 목표를 2년 조기 달성하고, 평균 비축일수를 59.9일에서 84.9일로 대폭 확대하여 위기 대응력 강화
- (재자원화 육성) 2030년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폐배터리 등 6종의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산업 육성 기반 다짐
- (자원개발 성과) 해외자원개발 용자 지원을 6년 만에 재개하고, 인니 니켈 및 필리핀 구리 등 해외 핵심광물 매장량 신규 확보
- (공단 정상화)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의 해외 부실 자산을 매각하여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자원 안보 전담 기관으로서의 기능 정상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 및 정책환류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분석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다소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한층 확보하고, 계획과 성과목표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도록 다수의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지표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글로벌 협력이 중요한 만큼 관련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 필요
-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성과지표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효과 및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이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비책이 수립되지 않음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 중 일부만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민관공 간담회 개최 등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조사 지원 건수는 다소 형식적 성과지표로 판단되며 금년도 목표치도 적극적이라 보기 어려움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희소금속 뿐만 아니라 산업공급망 위기 시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광물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 발굴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정책효과가 적절히 발현됨
6-②정책환류	하	과제 성공요인과 미흡요인 분석이 부재하며, 정책 개선에 반영한 실적이 없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제도 완비) 「국가자원안보특별법」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통합적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지원 제도 신설) 해외에서 확보한 핵심광물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용자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 (목표 대비 300%)
- (진단 및 탐사) 주요 핵심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동해 가스전 신규 탐사권을 설정하여 국 내 자원 개발 가능성 타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단계적 정책활동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이 미흡하고, 각 항목 간의 연결성이 다소 모호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자원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본 과제의 핵심 정책 목표이므로, 국내 대응 역량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일부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26년 목표치 설정 시 보다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
- 전반적으로 정책 및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 결과와 정책 수립 간의 구조적 연결성이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과정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은 진행하였지만 분석결과에 기반한 정책반영이 적절치 못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장단점 분석 결과와 대비책 수립 간의 연결성이 다소 모호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 중 추가적 핵심 성과지표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이행사항 미흡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동해심해가스전 이외 다른 여건 상황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 여부는 제시하지 않음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 4개 중 2개의 지표가 과거 실적치 대비 하향 조정된 목표 제시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대체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및 구체성이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5.42%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 발현이 미흡함
6-②정책환류	하	과제 성공요인과 미흡요인 분석이 부재하며, 그에 기반한 차년도 반영 계획이 미흡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1.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초격차 프로젝트 투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0대 분야 35개 프로젝트에 총 1.2조원 투자
- (신규사업 착수)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9,060억원), 무기발광디스플레이기술개발(4,840억원), 반도체첨단패키징기술개발(2,774억원) 등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 (규제특례 부여)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869건의 규제특례 부여, 85개 규제법령 정비 완료
- (경제적 성과) 456개사가 사업개시에 성공하여 누적 매출 1조 4,328억원, 투자 1조 5,660억원, 신규고용 2,321명 창출
- (R&D 예산 확대) 2026년 산업 R&D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편성(전년대비 18% 증가)
- (사업화 성과) 연구개발 사업화율 50.8% 달성(목표 50.7%, 100.2%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인재 양성 및 여성 공학인 진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확충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나, 해당 내용이 성과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 가동률, 지원 과제 수 등은 과정 중심 지표로, 전략적 R&D 투자 강화에 따른 실질적 정책 효과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다수의 내용이 연속과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전년도에 비해 어떤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명시적인 제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정책환경에 대한 적절한 분석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도 적절한 절차와 수준에서 수행됨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주요과제별로 심층성 있는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명확하게 제시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연구설비 가동률에 대한 재검토의 의견이 있었으나,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모니터링의 과정 및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됨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세부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비교적 타당함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일부 지표(예산확보율, 연구시설장비 가동률)의 경우, 중간산출물 혹은 도구적 목표에 해당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1.58%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 등 상위목표와 부합하는 과제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목표를 일정하게 달성함
6-② 정책환류	중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상시 대비책 제시 등 정책환류 과정을 적절히 수행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4
	7-3(2점)	0.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포함 총 16개 테마에 481억원 지원. 배양육(UNIDO 최우수상), BCI(CES 혁신상) 등 성과 창출
- (혁신성과) 삼극특허 4건, 투자유치 260억원, 기업멤버십 56개사 달성 (목표 40개 대비 140% 달성)
- (미래판기술 사업) 2025~2035년 11년간 총 3,026억원 투자 확정. 총 10개 테마(2026년 3개, 2027년 3개, 2028년 4개) 추가 지원 예정
- (AI 모델 개발) 물성예측AI 파운데이션모델(280억원), 열공정특화제조 AI모델(250억원) 개발 추진
- (탄소중립 기술)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투자 확대(2024년 824억원→2025년 1,287억원)
- (글로벌 기술협력) 해외 8개소 협력센터 구축(MIT, 프라운호퍼, 토론토대, UCL 등). 56개 공동연구과제 지원(1,040억원), 국내 연구자 200여명 해외파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상황변화 모니터링 결과로 나타난 대응 및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의 결과 측면의 성과나 상위 목표를 고려한 성과수준의 분석 및 모니터링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재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환류를 통한 차년도 계획의 충실성 확보 노력이 필요
- 성과지표에 지원 계획 테마의 양적 규모보다는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고, 정책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정책환경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대체로 충실하게 추진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알키미스트 사업 관련 비교적 정밀한 정책분석을 추진하고, 후속 사업으로서 미래판기술 프로젝트 추진 방식 개선 등을 실시한 점은 우수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지표개선에 반영하는 등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집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으나, 성과관리 관점에서 이들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내용임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목표치의 도전성은 대체로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음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성과지표의 대표성이나 타당성이 대체로 일정하게 확보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8.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이 일정하게 확보되며, 성과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음
6-②정책환류	중	환류 활동을 통하여 차년도 반영 계획을 적시하고 있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0.6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술이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 2,781억원 달성
(전년대비 12% 증가)
- (기술금융) 첨단전략산업분야 41개 중소·중견기업에 1,200억원 저리
융자 지원(1.3% 금리), CVC 스케일업 펀드 1,318억원 규모 조성,
민간투자연계형 R&D 를 통해 618억원 민간투자 유치
- (양자기술 산업화) 'K-양자산업 연합' 출범(34개 기관 참여), HW 300
프로젝트(1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
- (기술나눔) 33개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1,221건 기술 발굴,
284건 기술을 212개 기업에 무상이전
- (제도개선) 기술이전법 개정안 발의,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
획(2026~2028) 수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설정이 다소 모호하며, 상황변화에 대
한 구체적인 대처 사례가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제시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은 확보되나, 당해연도의 활동
성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지표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간 과정 지표(기술이전 활성화 부분 등)의 보완이 요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이해관계자들의 범위가 모호하고, 그 포괄성이 다소 미흡한 편임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분석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정책효과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추진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별도의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움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전년대비, 유사사업 대비 10% 이상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매우 우수하며, 이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평가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제시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은 대체로 일정하게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4.69%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제9차 기술이전, 촉진계획 수립을 통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등 중요한 정책효과가 발현됨
6-②정책환류	중	환류체계에 기반하여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년도에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됨
7-가점 항목	7-1(±2점)	0.6
	7-2(2점)	0.8
	7-3(2점)	0.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클러스터 매출 증대) 지역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액 69.4% 증가 (2017 년 대비), 기업당 평균 매출액 74.03억원→125.43억원
- (고용 창출) 기업당 평균 고용 19.3% 증가(28.03명→33.43명). 2024년 34개 기업 추가 유치
- (스마트특성화) 지역 내 사업화 매출액 971억원, 일자리 457개, 36개 기업 유 치 성과 창출
- (지역혁신성장 기반) 2027~2033년 총 8,000억원(국비 5,600억원) 규모 56개 과제 지원 계획 수립
- (한국형 퀵스타트) 교육생 340명 중 327명(96.2%) 이수, 321명(98.2%) 신규 채용. 참여기업 만족도 94점, 교육생 92점 달성
- (금융지원) 지역산업활력펀드 총 1,080억원 결성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의 심층성, 상황변화의 모니터링 수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과제의 전략 이행을 위해 부처간 협업과 지원상황 점검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
- 신규 기업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 수혜 기업 등의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원 기업의 질적 성장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역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 효과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장엔진 육성전략 수립 여부 지표에 대한 재검토 또는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정책환경에 대한 일정한 분석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적절하게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분석이 적절한 수준에서 시행되었으나, 그 심층성이 다소 부족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모니터링 활동은 일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나, 통상적인 모니터링 수준으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목표치의 도전성은 대체로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음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성과지표의 대표성이나 타당성이 대체로 일정하게 확보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지역균형 발전 등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정책효과도 일정부분 확인됨
6-②정책환류	하	성과분석에 기반한 환류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사례가 미흡함
7-가점 항목	7-1(±2점)	1
	7-2(2점)	1
	7-3(2점)	0.6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투자보조금 지원) 49개 기업에 2,792억원(국비 1,712억원) 보조금 지원, 지원 한도 100억원→150억원 상향
- (민간투자 유도) 민간투자 1조 5,466억원 유도, 지역일자리 3,126명 창출(목표 대비 98.1% 달성)
- (기회발전특구 확대) 전북·경남 2개 시도 추가 지정(1.7조원 투자계획) 기존 구역 신규 투자 1.4조원 추가 유치
- (인력양성) 맞춤형 교육과정 1,700명 수료(목표 대비 101.2% 달성)
-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수, 서산, 포항, 광양 4개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위기대응 지원) 추정 51.65억원 신설하여 이차보전 및 맞춤형 지원, 총 500건 지원(목표 200건 대비 250%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단계별 정책활동에서의 분석 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구체적인 설명과 각 항목 간의 연결성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회발전특구 조성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특구 자체의 성장과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성과지표로의 전환이 필요. 예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유치실적, 입주기업의 매출 및 이익 성장 등이 있을 수 있음(현 교육과정 수료 인원수는 적절치 못함)
-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실적이 창출되고 있으나, 지방투자촉진, 지역일자리 창출, 산업위기 대응 등 상위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체계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정책환경분석과 추진과제와의 연계성 및 이해관계자의 포괄성 등이 다소 미흡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정밀한 정책분석을 통한 기대효과 도출 등의 노력이 요구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별도의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통상적 수준의 모니터링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성과 기민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대체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과지표가 어떤 논리로 연계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와 설명이 필요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3.43%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정책효과도 일정부분 확인됨
6-②정책환류	하	환류와 관련한 기본적인 체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0.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산단 생산·고용) 산업단지 생산액 684조원, 고용 238만명 달성(최근 5년 내 최고), 중대 안전사고 22년 26건→25년 19건 감소
- (인프라 개선) 신산업공간 및 문화·편의시설 106개소 신규 확충(누적 403개 소), 산단환경개선 목표 대비 118% 달성
- (문화선도산단) 구미, 창원, 완주 문화선도산단 최초 선정. 산단환경 개선펀드로 민간투자 1.58조원 유치
- (디지털 전환) 스마트그린산단 디지털화 인프라 19개소 신규 구축(누적 101개소). AX실증산단 10개소 신규 추진(추경 400억원)
- (탄소중립 산단) 구미 산단을 탄소중립 대표산단 선정(총사업비 1,300억원), FEMS 228개사 신규 구축, 에너지절감률 5.04% 달성
- (RE100산단 조성) 2026년 범정부 예산 1,383억원 반영. RE100산단 특별법 제정안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분석과 개선, 개별 성과와 정책효과와의 연결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 과제와 사업이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실효적으로 기여하는 수준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지표의 대표성과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며, 환경 개선의 경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 평균 에너지 절감률 중심의 RE100 성과지표는 AX 실증산단 추진 시 해당 지표와 상충 되는 요소(에너지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정교한 친환경화 성과지표 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미흡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분석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다소 피상적임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상황변화에 따른 실질적 개선 사례가 있으며, 대응성과 기민성이 일정부분 확인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에너지절감 등 지표의 대표성이나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므로 재검토가 요구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0.56%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개별 과제나 사업의 실적과는 별개로 이들 사업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제고에 실효성 있는 기여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다소 어려움
6-②정책환류	중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1.6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 비전 수립)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법 개정 추진(정책위원회 총리 소속 격상)
- (수출 성과) 내수 중견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운영. K사 수출액 46% 증가, H사 수출액 5,200% 증가. 수출대상국 2개국→7개국 확대
- (글로벌 협력) 독일 산·학·연 기술협력 14개 기업 지원, 6건 협력성과, 국제협력 Meet-up Day 개최(80명 이상 참여)
- (금융지원) Rising Leaders 300을 통해 누적 171개사에 1.7조원 지원, 중견기업 혁신펀드 2,000억원 이상 조성
- (일자리 매칭) 일자리 박람회에 8,846명 참여, 2,500명 이상 채용 연계 (목표 1,600명 대비 136.1% 달성)
- (병역혜택 강화) 산업기능요원 배정비율 확대(2%→5%), 업체당 인원 제한 상향(2명→5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양호한 수준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견기업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대체로 적절하나, 본질적 목표(상위목표)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표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속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영업/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지표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다양한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의 체계도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음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분석의 심층성이 우수하며,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체계 또한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대책에 적극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모니터링 체계가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성과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세부 성과지표별 목표치가 실적 추이 대비 상향 설정되어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설정된 성과지표는 중견기업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과성과 구체성도 어느정도 충족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4.6%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정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6-② 정책환류	중	환류체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됨
7-가점 항목	7-1(±2점)	0.6
	7-2(2점)	1.4
	7-3(2점)	0.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월드클래스 지원) 월드클래스플러스 41개 과제 지원(284억원),
월드클래스 300 종료과제 누적 매출 8조 3,810억원
(투입예산 대비 10.43배)
- (상생협력 성과)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17개 과제 지원
(155억원), 성과공유제 계약 28건, 공동특허 출원 8건
- (중소기업 성장)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2개사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
- (수출 바우처) 수출 바우처 331개사 선정(250억원). 참여기업 타겟시장
수출액 147억불(역대 최고). 세계일류상품 83개, 생산기업 88개 신규
선정
- (R&D 고용 창출) R&D 직접 고용 320명 창출(예산 10억원당 5.73명,
산업기 술혁신사업 평균의 1.8배)
- (인력 채용지원) 청년 석·박사 73명, 경력인 14명 등 총 87명 채용
지원. 전문 교육 1,000명 이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년도 지적사항과 같이 사업의 상위목표 등을 고려할 때, R&D 관
련 직접고용 수 지표 1개만 설정하는 것은 명확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R&D 고용인력의 질적 수준, 장기적 방향에서의 투자(근속연수 등),
지자체·지역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 관련 지표 등을 포함할 필요
가 있으며, 상위목표 달성여부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수요조사, 기업 성과모니터링 등을 통한 충실한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하여 적절하게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수행됨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월드클래스 기업과 상생 협력형 사업에 대한 지원의 성과분석, 각종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였으나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상황변화를 적절히 반영함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목표치의 설정근거를 일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치 설정이 비교적 적절한 수준임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가 대표성 및 인과성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1.27%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중견기업 R&D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정과제(30번)에 대한 기여가 일부 확립됨
6-② 정책환류	중	환류의 시스템이 일정하게 갖춰져 있으며 이를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를 일부 제시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4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매출액 성과) 주요 유통업체 연간 매출액 189.6조원 달성
(목표 188.2조원 초과 달성)
- (참여기업 확대) 대규모 쇼핑행사 참여기업 2,864개사
(역대 최대, 목표 대비114.6% 달성)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10개 부처 합동 개최. 24개 참여기업 매출 8.8% 증가. 편의점 매출 14% 상승, 상생마켓 매출 62% 상승
- (소비심리 회복) 2025년 10월 오프라인 주요 유통업체 매출 6.6% 증가
- (유통혁신 인프라) 유통산업혁신펀드 200억원 최초 조성,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492억원 신규 기획
- (제도정비)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25~2029) 수립,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SSM 규제 4년 연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효과 및 정책환류에 대한 분석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과지표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유통업체 연간 매출액에 지원활동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기에는 인과성에 한계가 있어 중소유통 및 지역상생형 유통 생태계 등 해당 과제를 통해 달성 가능한 세부 성과 유형에 가중을 두어 지표에 반영하거나, 과제의 중간 과정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활동을 평가하는 등 개선 및 보완이 필요
- 결과측면에서 사업의 상위목표 달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지표를 발굴하거나 심층적 성과 분석을 시행하여 상위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일정한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하여 적절하게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수행됨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분석 및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정리 후 적절히 이행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여 대체로 수용·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모니터링 체계는 갖추었으나, 상황대응 사례가 구체적이지 못함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목표치의 설정근거를 일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치 설정이 비교적 적절한 수준임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기업의 매출총액 등 지원활동과의 인과성 입증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7.65%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높은 과제에 해당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거나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6-② 정책환류	하	환류의 시스템이 일정하게 갖춰져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거나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4
	7-3(2점)	0.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미 관세협상 타결) 11월 14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로 자동차·부품 관세 15% 인하 합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및 산업계 예측가능성 제고
- (통상전략 소통·협업 실적) 민관합동 통상전략회의 4회, 산업별 간담회 24회 등 총 55건의 소통·협업 실적 달성으로 목표 100% 달성, 산업계 의견을 통상정책에 반영하는 체계 구축
- (통상현안 조정 실적) 71건의 통상현안 조정 실적으로 목표(62건) 대비 115% 초과 달성, 산업부 내 범정부 통상협력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전략적 투자 MOU) 한미 정상회담 계기 3,500억불 규모 전략적 투자 MOU 체결(투자 2,000억불,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반도체·AI·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 (한국판 NTE 보고서) 통상장벽 보고서를 100여 개국 대상 한국판 NTE 보고서로 개편 추진(2025.11월~), 기업 애로사항 발굴·대응 체계 고도화
- (대국민 홍보 강화) 장관/본부장 기고 6회, 방송/인터뷰 19회, 기자간담회 등 총 22회 실시로 통상정책 방향 대국민 소통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구체성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소통협력 전략의 수립, 소통협력 과정 및 결과가 통상정책에 반영되는 과정 및 체계 정립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현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인과성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차년도 통상환경에 대해 가정적이라도 분야별/주요국별 분석을 통해 해당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없는지 고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계획수립 시 통계/사례분석, 전문가의견 수렴 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변화하는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협상 전략 수립 과정이 적절하게 이행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지적 사항 중 각종 회의 개최 건수와 통상 현안 조정실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적이 반영되지 않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주요국 통상정책과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상황 변화에 대한 적시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최근 3년 기준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지표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4.62%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통상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중	통상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정책환류를 적절히 수행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8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북미지역 협력 실적) 북미지역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대응 실적 77건으로 목표(62건) 대비 124% 달성, 한미 FTA 이행 50건으로 106% 달성
- (한미 관세협상 성과)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요 품목 관세 25%→15% 인하 합의, 공동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통상협력의 새로운 이정표 마련
- (전략적 투자 확대) 한미 정상회담 계기 3,500억불 규모 전략적 투자 MOU 체결, 삼성 450억불 투자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 (IRA 및 반도체법 대응) 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혜택 유지로 배터리3사 약1.9조원 수령, 반도체법 투자세액공제 25%→35% 상향
- (비자문제 신속 해결) 조지아주 구금사태 등 비자 문제 신속 대응, B-1 비자 및 ESTA 범위 명확화, 미대사관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 (국민 긍정평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 국민 55.8% 긍정평가, NYT/WSJ/블룸버그 등 주요 해외 언론 호평 및 37회 방미 협상 수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분석과정에서의 심층성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수준이 일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가 다소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적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통상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과지표가 투입과 과정 중심 지표이나, 가급적 정책성과에 근접한 지표를 모색하고, 단순 건수 이외에 비율 지표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다양한 통계의 정기적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분석의 심층성이 다소 미흡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성과지표의 인과성 미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다소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일정부분 적극적으로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관리과제의 이행 및 집행과 연계되어 있어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1.79%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상위 성과목표 및 한미간 경제안보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하	과제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이 확인되지 않으며, 차년도 반영계획이 불명확함
7-가점 항목	7-1(±2점)	1
	7-2(2점)	1.6
	7-3(2점)	0.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략적 협력 실적) 전략적 통상 협력 강화 40건, 전문가·기관·부처 협력 26건으로 목표 100% 달성
- (멕시코 관세 대응)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안 대응으로 우리 기업 영향 점검 및 관세인상안 의회 논의 중단·심의 연장 성과 달성
- (미-멕시코 관세협상 모니터링) 美-멕시코 관세협상·USMCA 재검토 등 현지 통상환경 변화 밀착 모니터링, 진출기업 집중 지원 및 정기 뉴스레터 제공
- (호주 공급망 협력) IPEF 활용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협력, 리튬·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 및 칠레 리튬 개발 지원
- (기업 애로 해소) 멕시코 세금분쟁·통관지연·공장 전력부족 등 현지 기업 애로 해소, 무역관 네트워크 및 헬프데스크 운영 강화
- (현지 협의체 운영) 관계부처 회의,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등 30여 회 개최로 실시간 애로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과 정책환류 활동에서의 분석내용이 다소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통상협력 대상국가의 범위가 넓은 만큼 SWOT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현안과제와 전략과제를 구분하여 접근
- 중기적인 지역 특화 전략의 수립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한 외부 통상 및 지역 전문가 그리고 정책 당국 사이의 협업을 통한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점 협력국 관련 지표를 별도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효과분석이 불명확하여 대비책 수립과의 연계성이 다소 모호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전년도 목표 및 실적 대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목표치의 적극성을 대체로 확보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설정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이 대체로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 성과 도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를 부분적으로 달성함
6-②정책환류	하	과제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이 확인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0.8
	7-3(2점)	1.6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유럽 협력 실적) 유럽 협력 및 통상현안 대응 72건으로 목표(59건) 대비 122% 달성, 전문가·기관 협력 62건으로 119% 달성
- (체코 원전 수주) 25조원 규모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원,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 장관급 9회, 국장급 11회 개최
- (한-EU FTA 이행)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8개 분야별 위원회(노동·환경·무역 등) 개최로 다양한 이슈 협의 및 협력 강화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비관세장벽 개선, 한국산 전기차 2개 차종(인스터, EV4) 신규 보조금 대상 확대
- (고위급 면담 집중) 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 등 EU 집행위 및 주요국과의 고위급 면담 20건 실시로 경제교류·협력 확대
- (신규 규제 선제 대응) EU 공급망실사지침·AI법·배터리법·CBAM 등 신규 규제 선제 대응 및 우리 기업 의견 반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과 정책환류 활동에서의 분석내용이 충분치 않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인과성이 충분치 않은 한계가 있는 바, 업무의 특성상 정량지표의 개발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대표성과 인과성이 있는 지표의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정책추진 과정 및 성과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계획 수립 시 정책 분석의 고도화, 성과지표 측정성 향상 등은 보완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치/경제 분석과 대비책 수립 간의 연계성 확인이 어려움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성과지표의 포괄성과 관련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체코 원전,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의 도전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성이 돋보임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려 노력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각각의 성과지표에서 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9.77%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특정 사업 수주 등을 통해 국정과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하	과제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이 확인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0.8
	7-3(2점)	0.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7억불 규모 인산 비료플랜트 계약 체결, 신북방 지역 해외플랜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해외플랜트 수주) 422억불 해외플랜트 수주액 달성으로 목표(384억불) 대비 110% 초과 달성, 중동·중앙아 지역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과
- (핵심광물 ODA) 우즈베키스탄·몽골 희소금속센터 조성 등 공급망 ODA 11건 강화, 핵심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확대
-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반 마련 및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 기회 모색, 러-우 양자 경제협력 복원 기틀 마련
- (네트워크 구축) 중앙아 정책포럼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 실적 40건 달성, 신북방 지역 통상협력 기반 강화
- (플랜트 협력 강화) 신북방 지역 플랜트 협력 및 희소금속 협력 등 11건의 경제협력 사업 추진, 장기적 경험 파트너십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정책효과분석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이 구체성이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타 통상 파트에 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계속 사업이 상당하여 연도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완 필요
- 성과지표 구성의 가중치가 형평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효과분석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그로 인한 대비책 수립여부도 확인이 어려움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ODA 관련 전년도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평가지표에 적극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상황변화 및 대응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미흡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노력이 돋보이며, 복합적인 지표설정으로 지표의 인과성과 구체성을 확보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2.6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신흥국, 글로벌사우스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국정과제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상	법제도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집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책환류에 적극 노력함
7-가점 항목	7-1(±2점)	0.8
	7-2(2점)	1.4
	7-3(2점)	0.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공급망 핫라인 가동으로 희토류·흑연 등 전략물자 수급 안정화, LG이노텍·SK스페셜티 등 기업수출입 허가지원
- (한일 산업협력)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 개최 및 3대 협력사업(반도체·배터리·수소) 발굴, 양국 산업 시너지 창출
- (한일중 경제장관회의) 9년 만에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재개, 3국 간 경제협력 모멘텀 회복 및 역내 협력 강화
- (통상현안 대응) 26건의 통상현안 대응 실적으로 중국 수출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등 주요 현안 해결 노력
- (민간 경협 지원) 24건의 민간 경협 지원 실적으로 동북아 지역 기업 애로 해소 및 진출 지원 강화
- (기업 애로 현장 대응) 중국 현지 기업 애로(통관·허가·규제 등) 현장 대응 다수 건 처리로 실질적 지원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정책환류 일부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동북아 지역이 우리 통상 이익의 핵심 지역이자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여 예측 기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중국,일본 관련 대응적 조치와 주도적 조치를 구분·관리하여 실적의 객관성을 추가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통계 검토,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노력이 강화되고 그 정책반영 노력이 충실하게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PETSEL 분석에 기반하여 정책 과정 평가 노력이 돋보임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반영 노력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다양한 외생변수로 인한 여건과 상황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시 대응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성과지표 모두 예년 실적에 비하여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현안 파악 > 대응전략 수립 > 협력 성과 창출이라는 흐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지표를 설정하여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을 충족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9.91%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대응/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국정과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하	추진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8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베트남 전략적 파트너십)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 방한 계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52건 MOU 체결 및 미래 협력 기반 구축
- (한-말련 FTA 타결)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로 아세안 제2위 교역국과의 무역자유화 달성, 전기차·반도체·할랄식품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추진 합의, 디지털·환경·노동 등 신통상 규범 포함한 포괄적 개선 추진
- (무역애로 해소) 74건의 진출 성공지원 사례 및 100% 무역 애로 해소율 달성, 전자담배 통관·SNI 인증 등 현지 규제 해결
- (수출 증가) 우리 수출의 대 아세안+인도 6.6% 증가, 동남아 시장 진출 기업의 실질적 애로 해결 및 수출 확대
- (정책협력 강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의 정책협력 및 FTA 협상 진전, 기업 진출 성공지원 체계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분석, 정책효과의 발생 정도, 시행 과정에서의 상황변화 대응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과지표의 인과성과 구체성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간의 주도성과 관의 선제적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성과지표를 투입지표가 아닌 해소비율로 수정·접근한 것은 긍정적이나, 해소 비율의 세부 구성요소 및 실적의 객관성(잠정 해결, 협의

건수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해외 통계 분석, 전문가 및 업종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이 적절히 수행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효과분석이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한 대비책 수립여부도 확인이 어려움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지표를 신설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집행과정 모니터링 여부나 여건변화 대처의 적시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일부 인정되나, 인과성과 구체성 보완은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2.48%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으나, 구체적 성과는 제한적임
6-②정책환류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환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0.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협력채널 운영) 협력채널 운영 29건으로 목표(24건) 대비 121% 달성, 기업 애로 해소 및 지원 69건으로 121% 달성
- (한-UAE AI 협력) 한-UAE 정상회담 계기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합의 및 3,500억불 투자 협력, 첨단기술 분야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 개척
- (한-사우디 비전 2030)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로 57개 과제 논의, AI·원전·수소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이집트 CEPA 합의) 이집트와 CEPA 협상 추진 합의로 아프리카 최대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협력 강화
- (UAE CEPA 경험위) 한-UAE CEPA 경험위 개최로 양국 경제협력 심화, 원전·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사업 발굴
- (아프리카 경제행사) 남아공 등 아프리카 거점국 릴레이 경제행사 개최로 9개국 진출 기회 발굴, 실시간 정책 협업 및 현지 상담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사례분석이 구체적이지 않고,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정책효과 발생 수준이 제한적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가 인과성 측면에서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2개의 지표가 협의체/면담이라는 형식만 상이할 뿐 각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대체할 새로운 지표 개발 검토 필요
- UAE, 사우디 등 일부 중동 국가 외 주변 협력 대상국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 반영도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사례분석에 대한 구체성과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수출동향, 협력국가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행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인정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통상협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적시 대응을 위해 노력함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 대표성을 지닌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00%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사우디, UAE와의 협력은 확인 가능하나, 그외 국가와의 협력 확대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6-② 정책환류	중	성공요인 및 미흡요인을 분석하여 협력전략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환류를 위해 노력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2
	7-3(2점)	0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공급망 협력 실적) 공급망·디지털·기후 협력 소통·협력 활동 84건으로 목표(70건) 대비 120% 달성
- (IPEF 의장국 수임)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서 역내 공급망 모의훈련 2회(의약품·핵심광물) 주도, 서울 등 10개국 초청
- (공급망 파트너십 확대) 한국형 공급망 파트너십(SCPA) 싱가포르(바이오/이행), 인도네시아(니켈), 호주(희토류) 등으로 확대
- (공급망 정책 수립) 31건의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실적으로 목표 초과 달성,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전략분야 공급망 안정화
- (이해관계자 협력) 23건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공급망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
- (다자 공급망 협력) IPEF, SCPA 등 양자·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단계별 정책활동 전반에서의 분석과정이 미흡하며,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의채널, 네트워크 중심의 과제추진 이전에 국내외 환경 및 정책분석, 정책 우선순위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성과지표의 인과성과 대표성을 다소 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재검토 후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
- 지표2(협상,협의)에서 지표1(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로 연계되는 중간지표를 설정·관리한다면 성과를 객관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을 것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 시행과정 반영이 미흡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방향 및 효과 분석은 확인되나, 분석결과에 따른 대비책 수립이 연결되지 않음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 중 일부만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모니터링은 진행되었으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며, 문제해결의 구체성이 미흡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관찰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면담·회의 횟수와 같은 지표는 실제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결과 중심의 대체 지표가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6.86%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못함
6-②정책품질 제고 노력도	하	과제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이 확인되지 않으며, 차년도 반영계획이 불명확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4
	7-3(2점)	0.6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EU 디지털 협정) 세계 최초 EU와의 디지털 통상협정 타결(7차 공식협상 완료)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선도, 데이터 자유이동 보장
- (DEPA 네트워크 확장)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후 중국·페루 등 신규 회원국 가입 협상 추진,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WTO 전자상거래) WTO JSI(전자상거래) 협상 주도로 71개국 지지 확보, 디지털 무역 다자규범 형성 및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구축 기여
- (디지털 인력 양성)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63명 양성(석·박사 과정)으로 정책 추진 역량 강화, 전문교재 개발 및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디지털 규범 대응) 33건의 디지털 규범 논의 대응 및 18건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적극 참여
- (디지털 협력 확대) 한-EU 외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력 확대, 디지털 무역 활성화 기반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참가 및 국내 의견수렴의 성과지표는 신통상질서 형성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지표(예. 특정 쟁점에 대한 Proposal 제출 건수)도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사전조사, 의견수렴이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사례분석이 이슈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심도 있는 분석에 기반하여 계획 수립과 추진노력이 관찰되며, 주요 이슈별 정책 분석과 대비책 수립 사례를 제시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여건과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당사국과의 각종 협의를 통한 적극적 대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예년 실적과 비교하였을 때,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국내 입장을 수립해서 대외 협상을 통해 반영하는 과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포괄적인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 평가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4.5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한-EU DTA 타결 등을 통해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중	과제 집행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환류 노력이 확인됨
7-가점 항목	7-1(±2점)	0.8
	7-2(2점)	1.6
	7-3(2점)	0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EU CBAM 대응)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권역별 합동설명회 6회(400~200명/회), 헬프데스크 2,736건 상담으로 우리 기업 인증서 구매 부담 경감
- (기후클럽 참여) 기후클럽 운영위원회 참여(운영위원국)로 저탄소철강 국제표준 논의 주도,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 국제협력 강화
- (CFE 이니셔티브)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확산 주도, 국가간 포럼 8회 개최(100여명 참여)로 청정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네트워크) 31건의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및 32건의 통상 현안 대응으로 기후에너지 통상정책의 산업계 수용성 제고
- (탄소시장 플랫폼) 탄소시장 소다자 플랫폼 구축 및 COP30 대응,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적극 참여
- (저탄소 전환 지원) 저탄소 전환 지원체계 마련 및 기후클럽 총회·공동포럼 개최로 국제 기후협력 주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과 정책효과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요소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표3(기후에너지 분야 협상이행)을 향후에도 파리협정 6조 이행 중심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회의·설명회 실적 외에 구체적인 이행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이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노력이 관찰되나,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핵심 정책의제별 분석을 통해 대비책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수행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이 관찰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대응방안을 적시에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각종 여건 및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정책환경이 중립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나, 목표치 설정이 적극적이지 못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대표성과 인과성을 확보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2.73%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과 사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함
6-②정책환류	상	정례적 회의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공유하고,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환류를 위한 노력을 적극 수행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2
	7-3(2점)	0.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략 마련 소통) 전략 마련 소통 30건으로 목표(20건) 대비 150% 달성, 신규 협정 추진 방향 수립
- (국내절차 이행) 국내절차 16건 이행으로 목표(15건) 대비 107% 달성, 협상 기반 강화
- (해외 아웃리치) 해외 아웃리치 37건으로 목표(32건) 대비 116% 달성, 전체 125% 실적
- (파키스탄·방글라데시 협상) 파키스탄·방글라데시 CEPA 협상 개시로 남아시아 거대시장 진출 기반 마련, 섬유·의류 등 주요 품목 교역 확대
- (이집트·탄자니아 합의) 이집트·탄자니아 CEPA 협상세척 합의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자원협력 강화
- (CPTPP 지지 기반) CPTPP 주요 회원국 4개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지지 확보로 가입 추진 모멘텀 유지, 아태지역 통합 참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 시행과정, 정책영향 단계에서 진행한 분석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양자협상이나 지역다자의 경우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맞춤형 설계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
- 성과지표1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한 실적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흐름을 고려할 때, 지표2와 지표3의 순서 변경도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노력이 관찰되나, 사례조사의 심층성은 다소 부족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의 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비책도 추상적임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이 관찰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일반적인 경제통상 이슈보다 FTA 체결에 초점을 맞춰서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최근 3개년 실적 대비 목표치를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되며, 인과성과 구체성도 일정 수준이상으로 확보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4.47%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양자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 개시 여건 조성 노력이 관찰되나, 기획과 관련한 노력이 좀 더 경주될 필요가 있음
6-②정책환류	중	환류를 통한 정책 과정 지속 노력 의지 관찰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말련 FTA 타결)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로 전기차·반도체·할랄식품 등 양국 핵심산업 협력 강화, 아세안 통상네트워크 확대
- (한-영 FTA 개선) 한-영 FTA 개선협상 연내 타결 근접,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통상관계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탄소중립 협력
- (한-에콰도르 SEC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정식 서명으로 중남미 농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 바나나·새우 등 교역 활성화
- (국내 의견수렴) 166회 국내 의견수렴으로 협상 투명성 제고, 산업계·시민사회 의견 반영한 협상 전략 수립
- (국가 간 협의) 240회 국가 간 협의로 협상 진전 및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 협상 타결 기반 마련
- (신규 협정 추진) 브라질 등 모듈형 신통상 협정 추진, 신통상협정 표준문안 마련으로 협상 효율성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정책환류 과정에서의 분석이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내 외 협상 실적 외 협상 추진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신규)가 있다면 성과를 보다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협상이라는 과정을 국내과정과 상대국과의 협상이라는 두 축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협상력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대국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노력 등도 성과지표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분석이 구체적임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협상전략 분석, 협상 단계별 진행상황 점검 등 정책분석이 적절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성과지표 개편 등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국내외 정세를 모니터링하고, 변화 발생 시 협상 전략을 수정하는 등 상황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지난 3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대표성과 인과성을 확보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정책효과 달성을 통해 상회 전략 목표 및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함
6-②정책환류	하	과제의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 차년도 반영계획도 불명확함
7-가점 항목	7-1(±2점)	0.6
	7-2(2점)	1.2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아세안 FTA 개선) 한-아세안/한-싱가포르 FTA 개선 범위 확정, 원산지·통관·전자상거래 등 규범 현대화 추진
- (캐나다 철강 TRQ) 캐나다 철강 TRQ 등 CUSMA 협정 위반 소지 현안 선제적 대응, 통상협정 이행 감시체계 강화
- (호주 스트리밍 규제) 호주 스트리밍 규제의 한-호 FTA 저축 가능성 대응, 디지털 서비스 시장 접근성 보호
- (이행강화 협의) 113건의 이행강화 협의로 통상협정의 실효성 제고, 협정 이행 모니터링 체계화
- (규범현대화 협의) 64건의 규범현대화 협의로 국가별·분야별 협정 현대화 추진, RCEP 등 10건 이상 협의·협상
- (공청회 확대) 싱가포르, 아세안, RCEP 등 10건 이상 공청회 개최로 업계 의견 반영 및 협정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과 계획 수립 시의 사례분석 내용이 일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통상협상의 체계적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체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입안되는 구조와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에서 FTA 이행강화(지표1)와 FTA 규범 현대화(지표2)의 세부 내용을 정제하여 협의를 통해 실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사례분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장단점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응책 수립 노력이 관찰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사전 예측시나리오 기반 정기, 전략 대응과 관련한 지적사항 반영이 미흡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이슈별 모니터링, 대응, 해소를 위한 노력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최근 3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설정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이 대체로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8.57%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FTA 이행관리 및 규범 현대화 관련 국정과제 이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중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을 통해 차년도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환류에 노력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FTA 교역비중) FTA 발효국 교역비중 77.2%(‘25.9월 기준)로 목표(77.1%) 초과 달성
- (통상협정 활용 제고) 통상협정 활용 제고 방안 수립으로 FTA 활용률 목표 80% 설정,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기업 컨설팅 확대) 5,522개사 FTA 활용 컨설팅 지원으로 목표(5,500개사) 달성,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강화
- (원산지시스템 보급) 37,355건 원산지시스템 보급으로 원산지 관리 편의성 제고, FTA 활용 디지털화 추진
- (농어촌상생기금) 농어촌상생기금 2,871억원 조성으로 국내 피해업종 지원 강화, 국내보완대책 53건 이행
- (미국 관세 대응) 미국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라운드테이블 16회, 1380 콜센터 상담 2,125건으로 신속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양호하나, 정책환류 과정이 일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내보완대책 이행건수(지표3)의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 다수의 실적이 이행상황 현장점검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보완대책 이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설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현황 및 장단점 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책을 수립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을 마련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최근 3개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 목표 설정 노력이 관찰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및 구체성을 충족하여 설정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1.31%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정책 효과 달성을 통해 국정과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6-②정책환류	하	세부 사업별 정책환류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은 결여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6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통상현안 대응) 통상현안 및 분쟁대응 231건으로 목표(170건) 대비 136% 초과 달성
- (美 상계관세 승소) 美 상계관세 소송(전기요금·탄소배출권) 3차례 파기환송 승소로 국내 기업 법적 권리 보호, 전기장판·타이어·냉장고 등 주요 품목 승소
- (에폭시 레진 성과) 美 에폭시 레진 반덤핑 행정재심 대응으로 마진율 16.02~24.65%→5.68~7.6% 대폭 축소, 기업 수출부담 경감
- (컨설팅 확대)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신설 및 111건 기업 지원 실적(~'25.12.1),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역량 강화
- (무역장벽 대응) 美 철강232/파생, EU 철강 TRQ 등 보호무역조치 신속대응, 간담회 30회·정례 실무회의 26회·FAQ/HS연계표 신속공개
- (현장 순회설명회) 현장 순회설명회 및 함량가치 계산 등 무료 지원 확대, 비관세장벽 선제적 모니터링 및 기업 애로 해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강화된 모니터링과 그로부터 도출된 대응 필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사안별 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 대응법 구축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요청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노력 관찰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 속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실시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개선 요청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충실히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꼼꼼한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유사시 적시성을 확보한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성과지표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노력이 관찰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을 확보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정책 효과의 달성을 통해 국정과제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보호무역 조치 피해기업 적극 지원"에 직접적으로 기여
6-②정책환류	중	성공요인과 미흡 요인을 정책 개선에 반영함
7-가점 항목	7-1(±2점)	1.2
	7-2(2점)	1.8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다자협력 실적) 다자협력·소통 100건으로 목표(80건) 대비 125% 달성
- (APEC 경제인 행사) APEC 경제인 행사(CEO Summit 3,800명+부대행사 13,000명) 성공 개최로 90억불 투자 유치 및 4.3억불 수출 계약 달성
- (언론 홍보 성과) APEC 행사 언론보도 690건, 유튜브 조회수 191만회 달성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제허브 위상 제고
- (WTO 투자원활화) WTO 투자원활화협정 체제 편입 주도로 다자무역 체제 내 투자규범 신설,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
- (다자협의회 참여) 37건의 다자협의회 참여 및 63건의 양·다자 소통으로 WTO 개혁 논의 적극 참여, 다자통상체제 기여
- (APEC 장관회의) APEC 통상장관회의(5.15, 제주)/합동각료회의(10.29, 경주) 성명서 합의, AI·공급망 이니셔티브 논의 주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PEC의 성공적 개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 도출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는 인정되나, 전반적으로 해당 행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기타 다자통상 관련 이슈에 대한 현황과 대응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차년도에는 다자통상 전반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의 구축과 정책실행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APEC 개최국으로서 과거 사례/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행사 진행 성공에 저해 요인을 식별·보완함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개최지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수시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와 과제들에 비교적 적절히 대응함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신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적절히 목표를 설정함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1,2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관리과제와의 연계성도 다소 모호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00%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APEC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여 한국의 리더십 확대를 통한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
6-② 정책환류	중	일련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정책 환류를 위해 노력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2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엘리엇 ISDS 승소) 엘리엇 ISDS 항소심 승소로 국가 주권 보호 및 불합리한 투자자 청구 방어, 정부 규제권한 확보
- (WTO 3자 분쟁 참여) WTO 3자 분쟁 7건(DS611, DS616, DS617 등) 참여로 국익 대변 및 통상규범 해석 영향력 확대
- (한일·한미 분쟁 대응) 한일 스테인리스, 한미 철강/변압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 등 핵심현안 법률지원 및 대응
- (통상법무카라반) 통상법무카라반 8회 개최로 지역별 찾아가는 분쟁예방 교육, 중소기업 통상분쟁 대응력 제고
- (법적 이슈 대응) 99건의 법적 이슈 대응 및 84건의 분쟁 대응기반 구축으로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고도화
- (WTO 퍼블릭포럼) WTO 퍼블릭포럼(Managing AI Trade and Disputes, 9.17, 제네바) 개최, 통상법무 정기해설/포털·판례평석(4천부) 발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 시행과정, 정책성과, 정책영향의 단계적 정책활동 전반에서 타 과제 대비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과제의 추진내용 및 성과는 일부 긍정적이나, 계획 수립에 있어 정책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 환류활동을 통한 정책개선 등의 노력 강화가 필요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수립되어 관리과제 달성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통상 규제의 선제적 분석과 대응책 제시에 대한 적극적 수행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분석이 아닌 단순 업무성과에 불가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분석이 명확히 진행되지 않음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이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관리과제와 업계 통상규범 설명회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항목 간 유기적 연결성 또한 결여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적극적이지 못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가 모두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구체성이 떨어지며, 의미가 모호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2.49%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구체적인 정책효과 확인이 어려움
6-②정책환류	하	과제의 분석과 차년도 반영계획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0.8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 전환)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20개소로 확대(전년 15개소), 디지털 무역인력 1,516명 양성, 디지털 수출 성약액 3.2억 달러 달성
- (수출 직결형 지원) 해외 전시회 한국관 100회 운영, 수출상담회 200회 개최, 수출 붐 업코리아 Week 개최로 70개국 1,700여 바이어 초청하여 4,042개 국내기업 참여 및 4.3 억 달러 성약 달성
- (무역사절단) 글로벌사우스 유망시장 중심 530개사 파견, 1,500만 달러 수출성약(계 약 및 MOU) 달성
- (수출바우처) 역대 최대 규모 1,458억원 지원(전년 561억원 대비 160% 증가)으로 중 소·중견 기업의 인증, 마케팅 등 수출 서비스 제공
- (관세대응 119) 미국 관세조치 대응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으로 8,800여건 상담 처리(관세 확인 6,100건, 생산거점 이전 250건, 대체시장 발굴 500건)
- (특화마케팅) AI, 바이오, 서비스, 소비재, 원전, 플랜트 등 분야별 글로벌 거점 90개소 운영하여 프로젝트 수주 및 수출 성약 창출
- (맞춤형 역량강화) 초보기업 대상 코알라 프로젝트로 1,287개사 지원, 중소기업 대상 전문무역상사 연계 동반수출, 중견기업 대상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 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적극적이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성과지표에 있어 목표치 설정 근거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를 기반한 목표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컨설팅, 설문, 협의 등의 결과와의 연계성을 높인 대응방안과 전략수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통계나 사례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연계성을 폭넓게 가져가는 방안이 필요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 효과 분석의 결과가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대안 제시 등이 부족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기존의 평가지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고려는 미비한 것으로 사료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관세 119 센터 설치하여 원스톱 상담관리 가능하도록 한 것은 우수한 대응임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일부 지표는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여 다소 소극적 설정으로 사료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설정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이 대체로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7.22%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미국 관세 정책이나 미/중간 분쟁 상황 등의 환경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6-②정책환류	상	요인 분석과 정책환류에 적극 노력함
7-가점 항목	7-1(±2점)	1
	7-2(2점)	1
	7-3(2점)	1.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원실적 최대) 2025년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106.8조원(전년 97조원 대비 10.1% 증가)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신규상품 도입)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신설(28개사 2,700억원 지원)로 대기업·은행 출연 기반 협력사 저비용·고한도 우대금융 제공
- (문화산업 지원) 문화산업보증 신설로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기업 14개사에 82.1억 원 보증 지원
- (특례지원 확대) 미국 관세 피해기업 포함 저신용·수출초보기업 대상 특례지원으로 23개사 1,030억원 보증 공급, 보증한도 최대 2.5배 확대
- (패키지 금융)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으로 2,500개 기업에 1.9조원 보증·보험 지원(은행 저금리 대출 + 무보 한도우대·보험료 할인)
- (공급망·환리스크 대응) 수입보험 지원대상 전품목 확대로 140개사 2.8조원 공급, 환 변동보험 345개사 7,898억원 지원
- (금융비용 완화) 보험·보증료 50% 일괄 할인,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단기보험 90%할인으로 5,588개사 382억원 지원
- (디지털 전환) 비대면·다이렉트 온라인 보증상품 고도화로 138개사 84억원 보증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과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나, 당해 연도 우리나라 총 수출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예. 총 수출실적의 20% 등)
- 무역보험 지원 실적 금액만을 지표로 설정한 점은 과거 지적되었던 수출저변 확대를 나타내는 지표의 추가 발굴과 불일치 되며, 지표의 다양화를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적절히 수집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이 적절하게 수행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수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부정적인 환경에도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무역보험 지원 실적 외 체계적 성과관리에 필요한 지표 마련이 필요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8.9%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상	무역보험 등을 통한 보호무역 피해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6-②정책환류	중	정책 환류를 위한 노력이 확인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2
	7-3(2점)	1.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첨단산업 FDI) APEC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계기 첨단산업 분야 총 90억 달러 규모 향후 5년간 투자계획 발표(FDI 신고 5.5억불 포함)
- (AI·정보통신)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로봇틱스 등 정보통신업 17.9억 달러(전년 대비 +25.7%) 투자 유입
- (그린필드 투자) 신규 그린필드 투자 도착 82.1억 달러(+23.0%)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첨단분야 R&D 연계 투자 증가
- (글로벌 기업 유치) 마이크로소프트, AWS, 베어로보틱스, 스트라드비전, 엠코테크놀로지, 에어리퀴드, 도쿄일렉트론, 솔라엣지, 르노, 오션원즈 등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 유치
- (인센티브 강화)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률 상향, 외투기업 R&D 사업 확대(연 15억→45억원), 추경예산 190억원 확보
- (국내외 IR) 대통령·장차관급 참가 해외 IR 6회, 국내 IR 8회 개최, Invest Korea Summit, 권역별 지역순회 IR 등 적극 유치활동 전개
- (규제개선) FDI 이행지원단 신설(9월), 옴부즈만 활동 강화, 외축법 개정추진 등 투자 환경 개선
- (인력매칭) 글로벌 토틀런트 페어, 권역별 채용설명회 개최로 외투기업-국내 청년 인력 매칭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효과, 정책환류 등 정책 영향과 관련한 분석과 체계가 미흡하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투자유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후 투자기업의 관리부분(개선사항 검토, 불법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필요
- 성과지표인 외국인투자 제도개선 건수는 목표 달성을 위한 형식적 제도 개선이 실행될 여지가 있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상	국내외 통계 및 동향,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충실하게 분석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이 적절하게 수행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93.33%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정책집행의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여건과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최근 5년간 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지 못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인과성, 구체성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충족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9.66%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과 사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함
6-②정책환류	하	정책환류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질적 성장) 2025년 신규 선정 유턴기업 12개사, 누적 156개사 달성, 자본집약적 업종 100%, 중견·대기업 비중 66.7%로 유턴의 질적 수준 향상
- (투자규모 확대) 기업당 평균 투자 계획 892억원으로 전년(737억원) 대비 지속 증가
- (특별지원) 관세피해기업 정의 신설 및 2026년까지 한시적 특별지원 (해외사업장 구 조조정 요건 면제, 보조금 지원비율 10%p 추가)
- (제도개선) 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을 '사업장당'에서 '선정건당'으로 변경하여 추가 투자 독려
- (전략적 IR) 베트남(5월), 중국(11월) 현지 IR 추진, 명함관리앱 배너 홍보 등 온라인 타겟 마케팅, 총 191건 유치활동으로 목표 대비 142% 달성
- (행정간소화) 신청 서류 중 12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기업 부담 경감(2026년 시행)
- (인프라 지원) 산업부 퀵스타트 프로그램 연계 인력양성, 산단공 공장 설립 인허가 사 전진단 서비스 시범 개시
- (경제기여) 조업 중 유턴기업 71개사 투자실적 1조 7,700억원, 직접고용 3,330여명 창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 정책 성과, 정책 영향의 정책활동에서 각 항목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며, 심도 깊은 분석이 진행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가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함
- 유턴기업 지원 제도/법령 추진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책 현장방문, 정책결과에 대한 홍보와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기획력 향상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통계 현황 분석내용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상호 연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음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정책집행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지난해 실적에 비해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상향 조정이 필요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의미는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7.5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책효과도 명확하지 않음
6-②정책환류	중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일부 확인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0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외협력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26회 협력채널 운영, 한미 협력으로 '첨 단 AI 수출허가 면제국' 지위 획득(2025년 1월)
- (중국협력) 한중 수출통제 대화 채널 통해 희토류 7종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 수출허가 발급 지원
- (전략물자 지정) 양자컴퓨터, AI반도체, EUV 마스크, 3D 프린팅 등 첨단산업 21개 품 목 전략물자 신규 지정(2025년 2월)
- (절차개선) 인도주의적 의료기기 대러 수출 상황허가 면제, AEO기업 CP 신청 심사 간소화,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 1회 연장 신설 등 5대 절차 개선
- (국내공조) 수출통제 이행위킹그룹 기획재정부까지 확대 운영(4회), 중고차 대러 우회수출 등 산업부 자체 직권조사 최초 실시
- (기업지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10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 영으로 64건 컨설팅
- (교육확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교육 이수 기업 533개사(목표 520개 대비 103%)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항목 간 연결성이 다소 미흡하며,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과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노력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교육이수 기업수라는 성과지표만으로는 실제 기업들의 수출통제이슈 대응 및 안보 강화 지원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기에 포괄적 대표성이 다소 미흡하여 추가 지표 발굴이 필요
- 대화 및 소통채널을 통해 수집된 협의내용이나 대화 내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 반영 노력을 정리하고 체계화할 것을 권고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적절한 통계분석과 많은 동향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계된 심도있는 분석이 부족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안전 발굴에 대응하여 수출통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CP제도 인식 조사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수출통제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수십차례 실시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한 대응을 위해 법령을 개정한 것은 소기의 성과로 판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과거 추세치와 무역환경 고려시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으로 사료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실제 기업들의 수출통제이슈 대처 지원에 관한 성과 측정에는 포괄적 대표성이 다소 미흡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5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제도개선요구에 따라 고시를 개정함
6-②정책환류	중	동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민관 네트워크인 무역안보연구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로 안착시킴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령개정) 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 개정(2025년 7월 22일 시행)으로 핵심기술 보유 여부 국가 직권판정제, 보유기관 등록제, 불법 M&A 이행 강제금 등 신설
- (심사효율화) 기술 수출 심사 기한 45일 한정, 반복 수출 면제·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완화
- (기술범위 현행화) MLCC, 아연 제련 등 국가핵심기술 3건 신규 지정, 15건 변경·조정
- (국제협력) 호주그룹(AG) 2회, NSG 2회, MTCR 1회 참가, 한일 디스플레이·MLCC 기술보호 면담, 한미 민감국가 지정해제 협력
- (범정부 대응)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 3회 개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참여로 국정원·검찰·경찰 공조 강화
- (현장조사) 58개 기관(국내 50개, 국외 8개) 현장조사 실시(목표 55건 대비 105.5%), 기술보호 이행 감독 및 취약점 보완
- (보안인프라) 중소·중견 39개사 보안 컨설팅, 13개사 CCTV 등 보안설비 구축 지원
- (인력양성) 8개 대학 통해 약 120명 보안전담인력 교육,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추진
- (보안역량) 산업기술 보유기업 보안역량 증가율 20.1%(목표 20% 대비 100.5%)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일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조사 실적은 매년 지속적 증가에 행정적 제약이 있고, 기술보호 역량 강화라는 과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기에도 구체성이 부족하여 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바를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지표 마련 필요
- 성과지표의 세밀한 설계를 통해 정책 효과성과 목표성 확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통계 분석과 현황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다양하게 시도한것으로 판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분석결과에 따라 대비책 수립이 양호하게 추진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외부자문을 거쳐 실태조사에서 측정 계산방식을 개선하고 수출승인 간소화에 대한 고시개정을 통한 지침을 마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일별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을 수행하였으며,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신규지정 등 수행하여 적시성을 높임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설정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이 대체로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2.98%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경제안보와 직접 연관된 내용으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보호법을 시행하고, 실태점검과 교육을 강화함
6-②정책환류	상	기술안보포럼을 다차에 걸쳐 개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으며,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개편 등을 추진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1.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조직강화)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 개편, 2개과 신설 및 16명 증원(4개과 43명→6개과 59명)으로 우회덤핑·표준특허 등 신규 조사수요 대응
- (전문성 제고)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임기제 3명, 민경채 1명), 신·구 조사관 1:1 멘토 링 및 무역구제 아카데미 9회 개최
- (국제협력) '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로 11개국 무역구제기관 160여명 참여, 29건 양자회의 진행
- (법령정비) 11건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완료(직전 3년 평균 대비 약 300%), 경제형벌 완화 및 한-UAE CEPA 대비 시행령 개정 등
- (모니터링 강화) 수입동향 모니터링 주기 반기→분기 단축, 화학산업 특화 모니터링 구축, 수입동향 시스템 고도화로 덤핑 징후 사전 감지
- (범부처 협업)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구성(9월 업무협약), 수입통계 실시간 공유 및 우회덤핑 공동대응 체계 마련
- (저변확대) 대응지원센터 2개소 추가 지정(총 26개), 모의 무역위원회(26개 대학) 및 논문 발표대회 개최
- (디지털화) 무역구제 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설계 완료 및 2026년 예산(12억원) 확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양호하나, 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석내용 간의 연결성이 일부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반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 채널을 구성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계획수립 측면보다 연중 활동 실적 위주이며, 조사와 소통이 상호 연계되어 조사 분석될 필요가 있음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 효과분석에서 장단점을 적절히 분석하고 항목별 대비책을 수립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최근 3년 중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직개편, 제도 개선, 보완 상의 적시성, 문제 해결 과정이 확인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상	목표치를 전년 대비 상향 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인과성, 구체성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충족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5.96%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무역구제를 통한 산업 통상 연계 강화로 이어져 국익에 일정부분 기여함
6-②정책환류	상	기존 미비점 (전문가 대응 인력 부족)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적으로 제고, 시스템 전면 재개편 추진 계획도 기존 미비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 추진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0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역대 최대 조사) 1987년 무역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조사 진행, 중국산 열연후판(7.4 조원), 일본·중국산 열연제품(10조원) 등 총 22건 조사 수행
- (판정실적) 13건 판정(예비·최종)으로 약 26조원 규모 국내시장 보호
- (우회덤핑 확대) 제3국 조립·완성 유형까지 우회덤핑 조사 범위 확대 제도개선 추진(2026년 1월 시행 예정)
- (보조금 조사) 글로벌 보조금 확대 추세 대응, 상계관세 조사 즉시 개시 가능하도록 매뉴얼 보완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조사기법 고도화) 이용가능한 자료(FA) 활용 및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사례분석으로 덤핑률 산정 실효성 제고
- (현장조사) 국내 현지실사 9건, 해외 현지실사 7건, 국내 제조현장 방문 2건 등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 (의견수렴) 공청회 9회, 이해관계인 회의 24회 등 총 35회 현장 의견수렴으로 판정 신뢰성 확보
- (산업분석) 열연, 광섬유, 산업용 로봇 등 5개 주요 품목 사전 경제산업분석 연구용역으로 전후방 산업구조 심층 검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효과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분석이 미흡하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무역구제 참여 기업수의 목표치는 과거 3년간 평균 실적으로 설정하였으나,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보다 상향하여야 함
- 사전 통계조사나 정책 간담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도화하는 선순환구조의 체계화 필요
-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관한 지표도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관련 통계나 사례 분석 등을 보고서로 발간하는 등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보고서, 간담회, 공청회 등 종합적인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을 적절히 수행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현행 목표치는 적극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려우며, 전년도 대비 실적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목표치가 감소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설정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이 대체로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8.24%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과 사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함
6-②정책환류	중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일부 계획에 반영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0.6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표준특허 기준) 통신·모빌리티 산업 표준특허(SEP) 조사·판정 기준 마련, FRAND 원칙 적용으로 커넥티드카 특허 침해 라이선스 협상 타결 지원
- (정밀분석 협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대 치과대학 등과 협력하여 헤드업 디 스플레이 중간막, 임플란트용 드릴기 등 고난도 사건 정밀 분석
- (법령개정) 불공정무역행위 금지대상에 거짓·과장 '광고' 추가, 산업영향 검토 의견조 회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확대
- (서식간소화) 조사신청 서식 11종(34쪽)→6종(16쪽) 축소, 작성요령 구체화로 개인·중 소기업 접근성 향상
- (징수매뉴얼) 과징금 징수 매뉴얼 마련으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 명확화
- (역대 최다 조사) 15건 조사 완료(전년 대비 107% 증가), 특허권 6건, 상표권 4건, 디자인권 4건 등
- (강력 사후관리) 과징금 미납 6건(약 7,300만원) 채권압류 및 추심, 13건 행정소송 적극 대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며, 정책 효과 발생 수준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산식 구조상 자체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양적 확대 중심인 지표 특성상 인력과 예산 제약 발생 시 관리가 어려워 과제 이행을 통해 달성되는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유사피해 방지, 관련 업계 만족도 등)의 개발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미흡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을 적절히 수행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수준은 적정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설정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충족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6.78%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책효과도 명확하지 않음
6-②정책환류	상	현장의견 수렴 등 정책환류를 위해 적극 노력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0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통·협력) 경제자유구역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경제자유구역의 날 개최로 정부-경자청 간 협력 강화 및 성과 공유
- (전략적 홍보) 2025년 공동홍보시행계획 수립, K-FEZ Day 2025 개최로 108개사 241명 외교사절·외신 대상 홍보, FDI 신고 13.13억 달러(10월 기준)
-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025년 1월 21일 시행)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지자체 개발계획 자체 변경 권한 강화
- (지구추가) 안산사이언스밸리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구 추가 지정(2025년 9월 22일)으로 글로벌 R&D 비즈니스 거점 확보
- (인프라 구축) 19개 기반시설 프로젝트 390억원 지원,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등 6개 진입도로 적기 개통으로 정주여건 개선
- (혁신생태계) 뉴욕주립대 FIT(4.8억원), 마린유젠트 연구소(6억원) 운영비 지원, 산학 협력 활성화 15억원 지원으로 46건 과제 수주(40.4억원)
- (디지털 전환)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혁신타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11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발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 시의 분석내용이 심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정책효과와 명확성과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수의 위원회나 간담회, 세미나 등 현장과 밀접한 행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연계하는 등 상호연계성 있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중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수나 정책협의회 개최수는 성장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지표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성과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통계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심도있는 분석이 부족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을 적절히 수행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비교적 적극적임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가 전략적 지표로서 성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성과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지표 설정이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5.97%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못함
6-②정책환류	중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일부 확인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1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체코 수주) 2025년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최종 본계약 체결, APR 1000 2기 공급 확정으로 UAE 이후 16년만의 원전 수출 및 유럽 최초 진출
- (한미분쟁종식) 한-미 원전 수출 및 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1월 8일), 한전·한수원-웨 스팅하우스 간 10년 넘은 지재권 분쟁 종료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합의(1월 16일)
- (미국진출) SMR 라운드테이블 및 원전 산업 간담회로 미국내 대형·SMR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 (UAE협력) 정상 순방 계기 원자력 신기술 및 AI 협력 MOU 2건 체결
- (베트남 협력) 신규 원전 도입 재개 대응, 한전-PVN 인력양성 MOU 체결(8월 13일) 및 공동 워킹그룹 운영
- (튀르키예협력)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 체결
- (기업지원확대) 원전수출 첫걸음 사업 지원대상 13개사→35개사로 3배 확대, 12개사 해외 발주처 벤더등록 전과정 지원
- (계약성과) 지원기업 5개사 수출계약 완료, 9개사 35건 추가 계약 추진
- (AI정보시스템)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AI 플랫폼 구축 완료 (12월 18일)로 중소·중견 기업 해외 입찰정보 실시간 분석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분석내용이 다소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간담회, 현장의견 청취, 기업 설명회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식별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세스 마련 필요
- 건수 기반의 목표 설정은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성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지표 영향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의견수렴도 실시하였으나, 심도있는 분석이 부족함
1-② 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1-③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적 대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이 충실하게 추진됨
4-①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비교적 적극적임
4-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설정된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이 대체로 적절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8.67%	
6-① 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목표한 체코 원전 수주를 달성하고 관련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수출역량이 강화됨
6-② 정책환류	중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일부 확인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1.8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표준개발 예산) 계속과제 179개(308억원), 신규과제 124개(117억원) 지원, 총 425억원 표준화 R&D 투자
- (국가표준 개발) 국가표준 개발·정비 3,554건(제정 352건, 개정 995건, 관리 2,207건)
- (국제표준 제안) ISO, IEC 등에 국제표준 88건 제안·승인, AI 신규 국제표준 5건 제안, 2건 승인
- (신산업 표준화)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 수립(국제표준 9종, 국가표준 10종 목표), SDV 표준화 협의체 출범(65개 기업, 6개 연구소)
- (KS인증) KS인증기업 8,728개(목표 대비 100% 달성)
- (표준 인프라) 참조표준 데이터 5,100여건 개발(누적 84,000여건), 성인 인체 데이터 3,000명 측정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과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미흡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목표치의 도전성은 제한적이며, 인증 기업 수는 인증 대상 확대에 따라 자연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 이를 통제하거나 목표치를 상향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첨단산업 등 새로운 신수종 산업분야에 대한 적극적 표준화 전략의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도 필요
- 신산업·지속가능사회 관련한 표준을 향후 국제 사실상 표준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려하여, 해당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수정·보완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표준화 정책 영역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의견수렴의 절차도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분석의 심층성이 우수하며, 이를 과제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일정하게 검토하고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모니터링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대응성과 기민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음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목표치의 설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산출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적극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상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과성과 구체성도 돋보이는 성과지표로 간주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58%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중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정책효과도 일정부분 확인됨
6-②정책환류	중	전년도 지적 사항 등을 종합하고, 산업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환류 노력을 추진함
7-가점 항목	7-1(±2점)	1
	7-2(2점)	1
	7-3(2점)	1.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교육 프로그램) 표준교육 프로그램 4,750명 참가(목표 4,362명 대비 108.8% 달성), 찾아가는 표준교육 173개교, 시범학교 15개교 운영
- (대학 표준교육) 고려대 표준지식학과 30명 신입생 모집. 4개 대학 석·박사 과정 40여명 양성, 4개 대학 융합강좌 240명 교육
- (산업계 교육) CEO 교육 4회(104명), KYP 프로그램 83명, 표준담당관 86명, KS인증심사원 116명, 기업실무자 1,007명 교육
- (국제표준화 임원) ISO·IEC 임원 293명 수임(역대 최대, 목표 278명 대비105.4% 달성), 국제의장 26명, 국제간사 39명, 컨비너 228명
- (정책이사회) ISO TMB 및 IEC MSB 이사 재선출. ISO, IEC 편심 의사결정 기구 진출
- (국제표준 외교) 세계 3대 표준화기구(ISO·IEC·ITU) 주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한국 주관 개최(300여명 참석). APEC SCSC 총회 2회 개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단계적 정책활동 전반에서 각 분석 항목 간의 연계성과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며,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참가자 수 등의 양적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각 양성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 배출 여부, 업무적용도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적 목표인 임원수를 활용하는 것 또한 한계가 명확하며, 리더십이 실효성을 갖고 작동함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의 발굴이 요구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정책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심층성이 다소 미흡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분석을 시행했으나 분석내용과 발굴과제 간의 연계성 및 정합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모니터링 체계는 갖추었으나,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성과 기민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목표치의 설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치 설정 또한 대체로 적극적임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한계가 있는 지표이며, 교육의 효과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7.85%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및 정합성이 다소 부족함
6-②정책환류	중	적절한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성과분석을 통해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2
	7-3(2점)	0.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불법제품 퇴출) 불법·불량 제품 5,002건 시장 퇴출, KC 미인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적발
- (해외직구 감시) 해외직구제품 안전성조사 1,004개로 확대(전년 대비 224% 증가), 133개 판매페이지 차단
- (통관단계 차단) 6,952건 검사 실시, 2,107건(약 179만개 제품) 수입 차단
- (모니터링 시스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28.7만개로 확대(전년26.5만개),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129,520건, 13,342건 조치
- (사고조사) 21개 사고조사센터 통해 52건 제품사고 원인조사, 해외리콜제품 3,609건 모니터링, 157건 후속조치
- (AI 활용) 해외 리콜정보 수집 기간 75% 단축, OECD 등록 예산 95% 절감, 뉴스 분석 시스템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효과와 정책 환류 과정에서의 분석 및 연계 내용이 다소 미흡하며,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도 적극적이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외리콜 제품 모니터링 건수는 전년 목표 대비 20% 상향하였으나, 전년도 실적치를 고려할 때는 다소 하향된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혹은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정부 내 협업체계 활용을 통한 시장감시 효율성 제고 및 AI 기반 제품안전관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상시 관리체계로의 정착 필요
- 현 지표는 양적 지표 중심으로 질적 성과 반영에 한계가 존재하며, 현장 및 오프라인에서 중대·고위해 및 증가 가능성이 높은 불법위해 상품을 집중 관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지표의 보완을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안전기준과 관련한 사회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활동을 수행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스왑 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한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모니터링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대응성과 기민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음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전년도 실적치를 고려할 때, 목표치의 적극성이 높지 않음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인과성이 어느정도 충족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7.5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기재된 국정과제와의 관련성이 낮음
6-②정책환류	하	환류체계는 갖추었으나,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체계성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7-가점 항목	7-1(±2점)	1.4
	7-2(2점)	1
	7-3(2점)	0.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비 실적) 법령 및 안전기준 정비 91건 달성(목표 75건 대비 120% 달성), 고시완료 83건, 법제처심사 7건, 규제심사 4건
- (해외직구 규제) 제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제품법 개정하여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판매차단 법적 근거 마련(2025.12.2 공포)
- (규제 개선)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영세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안전기준 제·개정)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기준 86건 제·개정, 국제표준 부합화 30건, 용어 정비 34건, 시장변화 대응 18건
- (안전환경 구축)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버튼형 전지 삼각사고 예방),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불법해제 방지 등 4건 안전기준 정비
- (이해관계자 소통) 간담회·공청회 7회, 입법·행정예고 31회 실시, 보도자료 22건 배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상황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하며,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경 간 거래 확대를 고려하여 해외 법령·기준과의 호환성 및 적용가능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
- 단일 성과지표로 관리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고, 법령 및 안전기준 정비 배경과 동기를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령의 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 국내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기본조성으로서의 계획수립이나 법/제도 정비를 위한 분석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상	분석내용의 심층성이 우수하며,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중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상시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른 접근으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반영의 사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중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목표치 설정이 비교적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으나, 안전기준의 정성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종합적 기대효과보다는 개별적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 근거기반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6-②정책환류	중	정책환류체계를 적절하게 갖춘 것으로 파악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1.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외인증정보)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통해 136개국 667개 인증정보 제공, 상담 203건, 설명회 8회(640명), 컨설팅 86개사 지원
- (해외인증 협력) 해외 시험성적서 국내 발급 211종으로 확대 (11종 증가), 인도 네시아 할랄, 베트남 CR 인증 등 신규 포함
- (KOLAS 평가) 공인기관 정기평가 709건 실시 (목표 572건 대비 123% 달성)
- (신기술 인증지원) NET, NEP, GR 등 총 1,186건 인증지원(목표 1,158건 대비 103% 달성), NET 375건, NEP 410건, GR 205건
- (1381 센터) 인증표준 상담 46,227건 처리(목표 대비 103% 달성)
- (지원 만족도) 시험인증산업 지원 만족도 86점 (목표 85점 대비 101.2%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수립, 시행과정, 정책성과, 정책영향의 단계적 정책활동 전반에서 타 과제 대비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행활동의 직접적 산출은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나, 정책이 목표로 한 기대효과나 상위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
- 성과지표가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인증서의 국제 통용성 제고라는 정책 성과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제 상호인정협정 확대 등 국제 연계 성과를 직접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거시적 정책환경의 분석이 누락되어 있으며 분석의 심층성도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하	정책의 효과성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심층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부분도 협소하게 제시되어 있음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을 일정하게 고려했으나 다소 피상적인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짐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나, 통상적 수준임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목표치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치 또한 적극적이지 못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중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있으며, 투입과 산출의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9.08%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이 목표로 했던 기대효과나 상위목표에의 기여도라는 관점에서 이를 입증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6-②정책환류	하	정책환류체계가 다소 미흡함
7-가점 항목	7-1(±2점)	0.6
	7-2(2점)	0.8
	7-3(2점)	0.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령 정비) 계량법 및 기술기준 총 4건 정비, 수입업자 신고 완화, 신고포상금 기준 합리화, 전력량계 형식승인 개선
- (시장관리 강화) 시판품 조사 1,014건, 소비자감시원 적발·계도 1,516건, 불법·불량 신고센터 처리 270건(총 2,800건)
- (수소 계량 기술) 수소 전주기 계량 신뢰성 강화 인프라 구축(199억원), 생산-운송-활용 소급성 기반 마련
- (전기차 계량) 전기차충전기 재검정 기반 구축(11억원), 2027년 최초 재검정 수요 대응
- (미래 R&D) 미래선도형 R&D 5년간 총 320억원 신규 기획(2026년 예산 반영)
- (국제협력) OIML 총회, APLMF 포럼, 한-중·한-싱·한-태 양자회의 등 5건 국제 협력 활동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시행과정, 정책 성과, 정책 영향 측면에서 구체적 분석내용이 미흡하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규 지표 비중 대비 목표치 산출 근거가 미흡하며, 규정 정비·국제협력 활동 건수는 난이도 차이로 인해 건수 중심 성과관리의 한계가 존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 처리는 상시적 관리 성격이 강해 핵심성과 지표로는 적절치 않으며, '측정기기 관리'에서 '측정 관리'로의 시스템 전환, 산업계량의 중요도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국제협력 활동 지표는 단순 활동에 그치지 않고 활동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검토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중	각종 실태조사와 사례분석도 실시하여 계획수립의 적절성이 제고하려 노력함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분석의 심층성이 적절하며,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미흡한 수준임
2. 추진일정의 충실성	95.24%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모니터링 체계는 갖추었으나, 상황대응 사례가 구체적이지 못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신규지표의 목표치의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목표치 설정이 적극적이지 못함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으나, 지표 간 연계성이 높지 않고,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음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9.16%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과제나 사업이 표방했던 기대효과나 상위목표 달성에의 기여도는 명확하게 소명되지 못함
6-②정책환류	중	미흡한 점을 발굴하여 차년도에 반영하는 체계는 일정하게 구축되어 있는 점이 확인됨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1
	7-3(2점)	1.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TBT 협상) 284건의 해외 무역기술장벽 협상 실시, 137건 기업 애로 해소, 애로 해소율 48.2%(전년 36.6% 대비 향상)
- (수출효과) 총 940억불 규모의 수출효과 창출, 베트남 배터리 성능시험 요건 삭제(3.8억불), 콜롬비아 자동차 인증기준 개선(3억불), 인도네시아 SNI 인증 유 예(5.2억불)
- (기술규제 분석) WTO TBT 통보 4,163건, 미통보 규제 6,151건 발굴, 주요규제 2,264건 심층분석
- (기업지원) 맞춤형 컨설팅 325건, 품목별 협의회 56회, 기업간담회 2회 개최
- (FTA 협상) 한-말레이시아, 한-태국 FTA TBT 협상 타결, 총 71건 FTA TBT 협 상·이행
- (인력양성) 실무교육 5회(157명), 고위과정 1회(34명), 대학 정규강좌 11개(237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계획 수립, 시행과정, 정책 영향 측면에서 심도 깊은 분석과 대응이 제한적이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측면에서도 일부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으나, 전년도 실적치와 목표달성도를 고려할 때 목표치가 다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목표치 설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과제의 상위목표의 이행정도를 점검하거나 그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정량지표 발굴이 필요
- 현재의 지표가 과정 지표 중심으로, 실제 애로 해소율 등의 결과 지표를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전조사를 이루어졌으나, 심층성은 다소 부족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분석의 심층성이 적절하며,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상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검토하고, 이를 개선활동에 충실히 반영함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하	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적 대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이 다소 미흡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목표치 설정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치 또한 다소 낮게 설정된 부분이 있음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 인과성, 구체성 등이 다소 미흡함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정책효과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못함
6-②정책환류	하	정책환류체계가 일정하게 갖추어졌으나 이를 활용한 사례의 우수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7-가점 항목	7-1(±2점)	1
	7-2(2점)	1.4
	7-3(2점)	0.2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전심사) 17개 부처 96개 법령 128건 규제사무에 대해 기술규제영향 평가 실시, 83건 개선의견 제시. 신설인증 14건 심층검토
- (사후정비) 80개 인증제도 검토, 67개 제도 정비방안 마련. 23개 제도 폐지, 1개 통합, 43개 개선
- (기업부담 경감) 향후 10년간 약 2,800억원 기업부담 경감 전망, 실효성 없는 제도 폐지 및 운영방식 개선
- (거버넌스 운영) 기술규제위원회 20회, 전문분과위원회 24회 개최, 기업애로 42건 발굴, 35건 개선협의
- (OECD 평가)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 38개 회원국 중 1위 달성
- (디지털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전 과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 업무 효율성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환경분석의 심층성이 부족하며, 정책성과와 효과가 잘 나타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난이도를 감안하여도 전년도 실적 수준과 실제 목표 달성률을 고려할 경우, 목표치가 충분히 도전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본 정책과제의 특성상 의견수렴은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표를 유지하기보다는 정책과제의 업무성과를 연중 지속적·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체 성과지표 도입 검토 필요
- 규제 개선·폐지 여부 등 최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지표 보완이 필요하며, 아울러 업계 영향력이 큰 핵심 기술규제에 집중할 수 있는 질적 평가체계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①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정책환경 분석이 일정하게 수행되었으나 심층성이 다소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의 대상이나 범위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음
1-②정책분석의 적절성	중	정책효과 분석에 기초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됨
1-③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수렴 여부	하	전년도 지적사항 중 지표개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00%	
3.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중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며, 기민성과 대응성을 입증할 만한 사례가 제시됨
4-①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하	목표치 설정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치 또한 도전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4-②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하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으나, 도구적 목표에 해당하여 상위목표에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
5.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20.00%	
6-①정책효과 발생정도	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획기적 제도 개선으로 보기 어려움
6-②정책환류	중	과제의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를 일정부분 갖추고 있음
7-가점 항목	7-1(±2점)	0
	7-2(2점)	0.8
	7-3(2점)	1.4
	7-4(-1점)	0

* 상기 항목과 가점 항목을 90점으로 환산 후 각 국단위의 성과목표 점수(10점 만점)와 합산하여 과제의 최종평가등급을 산출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 -2-1.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6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26~'30 소부장 기본계획에 따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 마련으로 지연 으뜸기업 공고 지연 * 으뜸기업 필수 자격요건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소지 기업 ○ 핵심전략지도 완료('26.上')시 26.2Q에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계획
I -4-2. 안정적인 국내 배터리 생태계 조성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사업(포항블루밸리) 공사 착수	○ 염처리수 지하관로시설 착공을 위한 설계 완료 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25년 내 미착공 ○ 해당 사업은 단년 지원 조건이며, 사업기간 내 착공 불가로 사업 종료됨
V -2-1.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	○ 당초 '25년 하반기 개정 예정이었으나, 국무조정실 주관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알정에 맞추어 '26년 개정 추진 ○ 현재, 규개위 사전규제심사('25.11.25, 규제심사대상 없음) 등 사전 절차 완료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후 공고 및 시행 추진('26.2월)
VI-3-2. 상거래 신뢰성 강화 및 계량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 한·일 계량협력 위원회	○ '25년 한·일 계량협력 위원회 MOU 갱신을 위한 우리측 개최 제안에 일본측 사정으로 미갱신 ○ 대신, 국제기구(OIML, APLMF 등) 회의 계기 양국 협력사항을 논의하기로 상호 협의

[붙임] 2025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기관 개요

(1) 조직

- 본부 : 장관, 차관, 1본부, 1차관보, 6실, 3국·18관, 70과 8팀
 - － 기획·직속 분야 :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3관 9과 1팀
 - － 산업 분야 : 산업정책실 4관 16과 3팀, 산업기반실 3관 9과 1팀
 - － 자원·원전수출 분야 : 자원산업정책국 4과 1팀, 원전전략기획관 2과
 - － 통상 분야 : 통상정책국 1관 6과 1팀, 통상협력국 4과, 통상교섭실 3관 11과 1팀
 - － 무역·투자 분야 : 무역투자실 3관 9과
- 소속기관 : 1위원회, 8원, 5소, 1기획단
 - *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7개원), 광산안전사무소(4개소), 광업등록사무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인원

- 정원 : 1,214명 (본부 787명 + 소속기관 427명)

구 분	계	정무	고공 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관리 운영	연구 직	전문 직	전문 경력 관
계	1,214	3	37	25	76	97	368	481	23	78	23	3
본부	787	3	29	22	49	86	283	288	5	1	18	3
소속	427	0	8	3	27	11	85	193	18	77	5	-

□ 핵심기능

**산업구조 혁신,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소부장 산업
육성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첨단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지원, 주력산업 대전환,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회복
- 기술개발, 다변화, 비축 등으로 핵심품목 공급안정성 강화, 소부장 특화 단지에 R&D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급망 강화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혁신전략을 수립·추진 하고 R&D, 제도·인프라 확충 및 시설 투자 등 지원 강화
- 민간의 신속·과감한 투자와 경쟁국 수준의 범부처 지원으로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적극적인 핵심광물 확보, 석유비축 등 안정적인 국내 석유·가스 수급 관리를 통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기술기반의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지역과
기업의 성장 견인**

-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 추진
- 5극3특 중심 균형성장 지원체계 마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위기 대응,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RE100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 및 유통업계 발전 지원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

-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통상 간 전략적 연계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활동 지원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상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

**수출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통상의
연대 구축 위해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 강화**

-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층적인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FTA 이행·활용 추진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 및 논의 주도를 통해 우리 경제외교 위상 제고 도모

**수출구조 혁신 및
외국인 투자
확대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여**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무역보험 지원 확대로, 수출역량 확충 및 수출 저변을 확대
-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외투유치 및 유턴 촉진 등을 통해 투자유치 모멘텀 유지·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 수출통제 적시 대응 및 산업기술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무역안보 리스크 최소화
-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추진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 전략을 적극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신규일자리 확대에 노력
-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의 기회를 살려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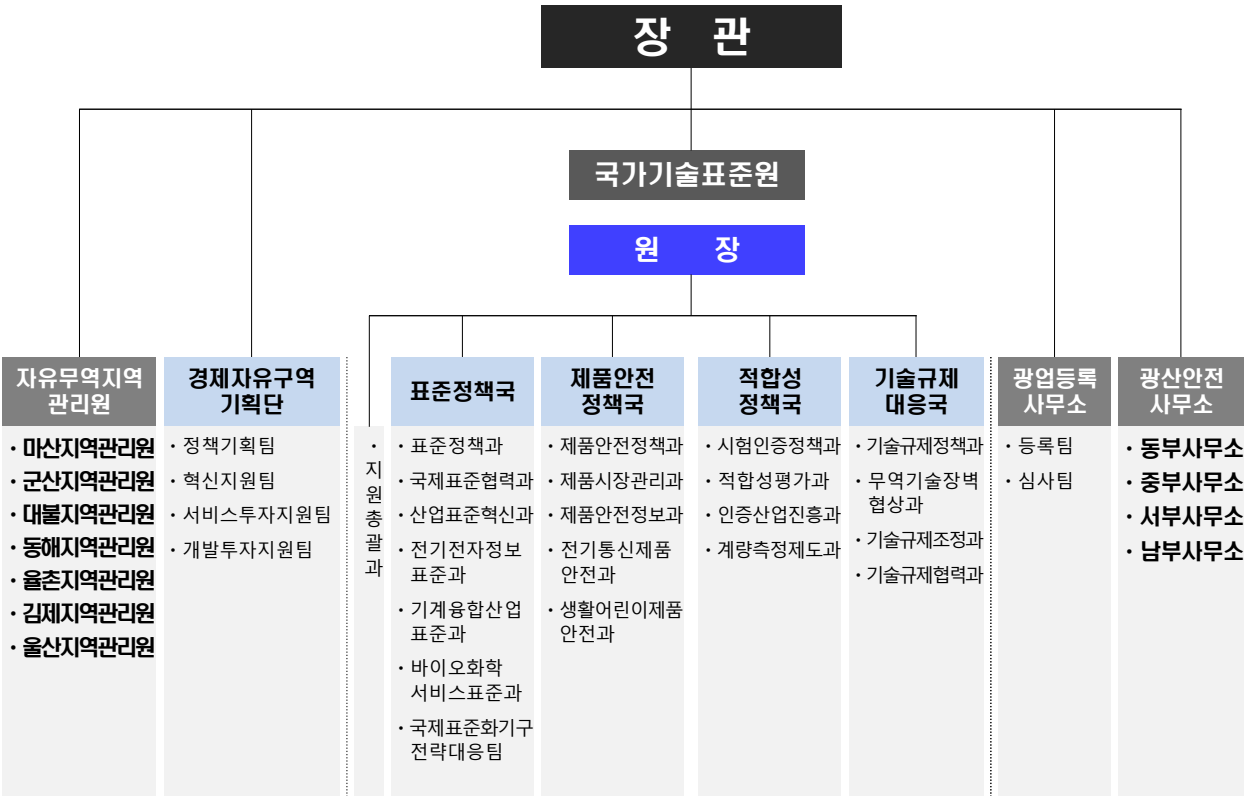
**표준·인증 혁신
통해 지속가능
사회와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 지원**

- 기업의 신시장 창출 및 수출 지원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확보하는 표준정책 추진
-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 등 기술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 확대 등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 글로벌 인증환경 변화와 新수요에 대응하는 시험인증 서비스 경쟁력 확보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확대
-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술규제 혁신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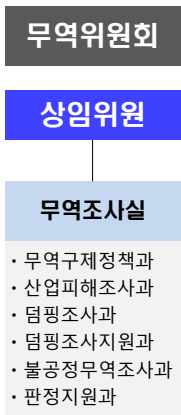
□ 산업통상부 조직도 (2025. 10월 기준)



□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조직도 (2025. 10월 기준)



* 공통 : 관리과, 수출산업과
 * 투자홍보과(마산), 투자유치과(군산)
 * 동해, 울촌은 하부조직 없음
 * 경자단 내 팀은 비직제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

비전	수출 · 투자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지역 경제 및 투자 활성화 -
----	---

전략목표

I.	II.	III.	IV.	V.	VI.
산업구조 혁신,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술기반의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지역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고도화 한다	수출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통상의 연대 구축을 위해 양자·다자 통상네트워 크를 강화한다	수출구조 혁신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표준·인증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 사회와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지원한다

성과목표

[illegible]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1. 산업구조 혁신,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

□ 성과지표 개요

〈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 〉

- 개념 :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설비·노동력·조업시간 등)하에서 최대 생산 가능량
- 조사기관 : 통계청
- 조사대상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약 7,700개)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거나 유선전화, 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조사
- 측정산식 : 비교시 생산가능량 / 기준시 생산가능량('20년) × 100

□ '25년 측정결과

- '25년 연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3.1*'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25년 연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26.2월 공표 예정으로, 현재까지 공표된 '24.1~11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평균하여 연간 값을 계산

- 이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 가능 역량이 역대 최고치('25년 102.3)를 경신한 것으로 직전 5년('20~'24년) 평균 대비 1.5p, 전년('24년) 대비 0.8p 높은 수준입니다.

< 최근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0~'24년 평균
98.5	100.0	102.0	102.1	101.6	102.3	101.6

□ 성과분석

-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美 관세 이슈 등으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먼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 － 용인반도체일반산업단 1호팍 부지조성 완료 및 1기 팍 건설 '25.2월 착공('27.5월 완공 목표), 용인·평택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신설('25.4월, 예타 면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 － 배터리 핵심소재 관련 '국가전략기술 R&D·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분야 확대*를 통해 배터리 소재 개발·생산 지원 강화하였고, 친환경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소재 성능고도화 지원, 고출력 축전지 제조 기술개발 등 추진 등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내 국가전략기술 및 시설에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화합물”을 추가
- －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25.9)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등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정책 패키지 마련했습니다.
- 두 번째로 적극적인 대미 관세 대응을 통해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 한-미 조선협력(MASGA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 － 이로써, 조선업이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적인 협력 분야로 부각

되며, 한-미 동맹 관계가 질적으로 도약하는 등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25.4월) 및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25.11월) 발표, 금융 지원 예산 추가 확보*('25.4월) 등을 통해 美 관세 극복에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친환경차이자보전사업 : '25년 본예산 55억원 → 추경 20억 추가 확보 (총 75억원)

-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美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선박의 경우 '18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산업 공급망 안정화 기반 강화 등을 통해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주요국 수출통제 등 상시화되는 대내외적 공급망 리스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을 200여개로 개편('25.8)하였습니다.

* 연 수입액 1백만불 이상, 특정국 의존도 50% 이상, 산업 밸류체인 영향 등 고려

- 또한, 경제안보품목(산업부공급망안정품목 등)의 정성·정량 정보를 종합, 주기적으로 위험도(관심·주의·경계·심각)를 평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지속 가동하였고,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EWS의 위기징후 탐지, 정보수집 능력 고도화하였습니다.

* 교역·가격 등 빅데이터와 공급망 패턴을 AI로 분석 : 품목별 위기징후 파악 능력 제고
글로벌 공급망 정보 크롤링(실시간 수집·추출) : 세관고시, 외신뉴스 등 키워드·감성 분석

○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 재편등 산업구조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 12개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예산 2,048억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하였고, 휴머노이드와 첨단

항공엔진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지정('25.7)하였습니다.

- 또한, '16년 이후, 총 581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25년 51개사 승인)하고 신규고용 2.4만명, 투자유치 39.8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제조 AI 대전환(M.AX :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을 통해 산업과 AI 융합으로 차세대 제조경쟁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❶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업종별 최고 수준 AI 모델과 제품 개발
 - 첨단 AI 팩토리 구축, 양질 데이터 기반 제조 AI 생산 모델 개발
 - AI가 탑재된 제품 융합으로 경쟁력 혁신(예: 완전자율운항선박)
- ❷ 공급망 내 수직적 AX 및 지역 산업으로 M.AX를 공간적으로 확산
 - 공급망 내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 구축('26, 60억원)
 -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X 실증산단 13개 조성('26, 260억원)
- ❸ M.AX 필수 투입요소인 데이터, 예산, 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
 -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위한 기술 확보·플랫폼 구축('26, 116억원)
 -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한 예산사업 우선 반영 및 규제 신속 개선

-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❶ 반도체: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 분야 수요연계 AI 반도체(NPU) 개발, 차량용 MCU, 전력반도체 등 미들텍 반도체 우선구매 등 국산화
- ❷ 이차전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국내 신규 수요 창출(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 등)
- ❸ 자동차: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SDV 플랫폼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 ❹ 조선: LNG 화물창(KC-2) 실증,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기술 확보, 지역 기자재 생태계 지원을 위한 수출공급망 보증 프로그램 신설

-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❶ 금융: 국민성장펀드 본격 출범(12.10) 계기, 1,2~N호 메가프로젝트 설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증손회사 의무지분을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
- ❷ 탄소: 산업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26~'27), 「산업 GX 촉진법」 제정(기존 「친환경산업법」 전면 개정) 등
- ❸ 사업재편 : 구조적 위기 판단시 업계·지역협의체 공동 구조혁신 계획 마련, 지역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지역위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6.下)

성과지표

연구개발 사업화율[%]

□ 성과지표 개요

〈 연구개발 사업화 성과 〉

- 개념 :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R&D 수행과제 중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과제의 비중
- 조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조사대상 : 매년 1~5년차 종료과제 중 사업화목적과제
(‘20년~’24년 종료과제 8,100개 중, 6,674개 과제)
- 조사방법 : 전문기관(KIAT·KEIT·KETEP)별 성과활용현황조사 통합·활용
- 측정산식 :
$$\frac{\text{경제적 성과(비용절감액, 제3자 기술이전액, 사업화매출액) 발생 과제수}}{\text{사업화 목적과제 수}}$$

○ (지표 의의) 사업화율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 매출 등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객관적인 지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6차) 성과목표, 지표 설정 안내서」 연구개발 중·장기 성과지표 예시로 제시

○ (조사 연혁 및 산출 방법) 우리부는 '13년도부터 매년 최근 5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활용현황조사를 실시

－ 각 전문기관별로 성과활용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며, 이를 활용한 종합분석을 통해 성과를 산출

□ '25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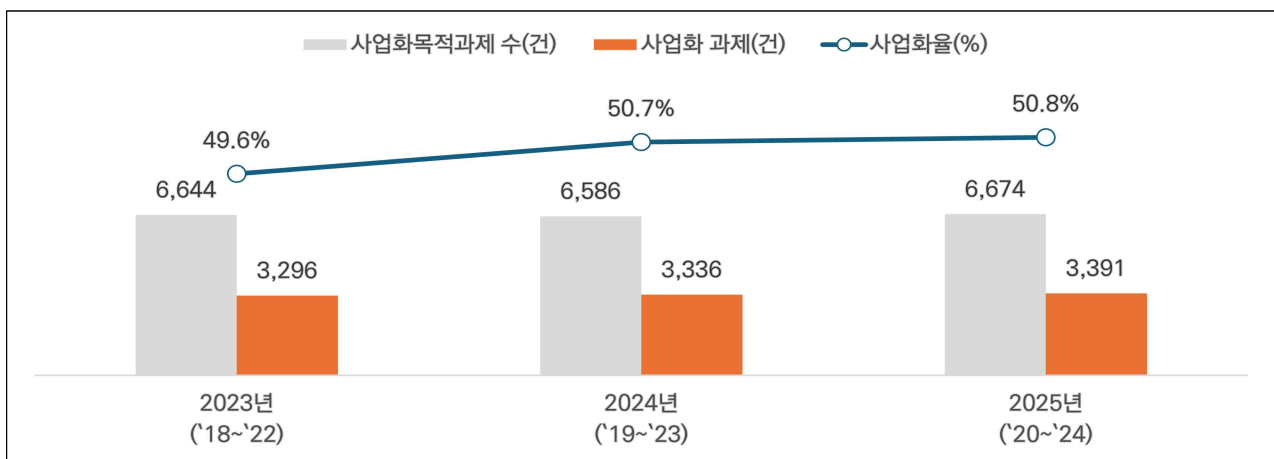
- (분석모수) 최근 5년 '20~'24년에 종료된 총 8,100개 과제 중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6,674개 과제를 분석 모수로 설정
 - － 연구기획, 단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는 분석 모수에서 제외
- (사업화율) 사업화 목적으로 하는 6,674개 과제 중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과제를 측정한 결과 3,391개로 확인되었으며 사업화율은 50.8%로 측정

<'25년 사업화율 성과지표 측정 현황>

구분 \ 과제 종료연도	2020 (종료5년차)	2021 (종료4년차)	2022 (종료3년차)	2023 (종료2년차)	2024 (종료1년차)	계
총 과제수	1,483	1,519	1,723	1,543	1,832	8,100
사업화목적과제 수 (A)	1,229	1,172	1,452	1,249	1,572	6,674
사업화 과제 (B)	712	674	768	548	689	3,391
사업화율 (B/A)	57.9%	57.5%	52.9%	43.9%	43.8%	50.8%

- － (최근 3개년 성과 비교) 사업화율은 '23년 기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5년 사업화율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50.8%를 달성

<최근 3년간 사업화율 성과지표 추이>



<최근 3년간 사업화율 현황>

구분	2023년 (‘18~’22종료과제)	2024년 (‘19~’23종료과제)	2025년 (‘20~’24종료과제)
총 과제수	8,089	7,989	8,100
사업화목적과제 수 (A)	6,644	6,586	6,674
사업화 과제 (B)	3,296	3,336	3,391
사업화율 (B/A)	49.6%	50.7%	50.8%



- (달성 원인분석) 사업화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집중된 투자 운영을 통해 사업화율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
- (사업별 분석) 지역 및 중견기업 육성 사업에서 사업화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기계·바이오·소재 사업에서 사업화 과제 수가 크게 증가

<’24~’25년 주요 세부사업별 사업화율 증감 현황>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사업화 대상과제	사업화 과제	사업화율	사업화 대상과제	사업화 과제	사업화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229	208	90.8%	211	196	92.9%	높은 사업화율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148	124	83.8%	108	99	91.7%	
광역협력권산업육성	263	240	91.3%	243	222	91.4%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1	0	0.0%	200	122	61.0%	사업화 지원 증가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1	1	100.0	174	59	33.9%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0	0	0.0%	219	105	47.9%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267	120	44.9%	619	306	49.4%	
소재부품기술개발	474	234	49.4%	712	367	51.5%	

□ 성과분석

- 역대 최대 규모의 산업 R&D 예산을 편성하고 전략적 R&D 투자 강화
 - '26년 산업 R&D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5.5조원, 전년대비 18% ↑)
 - * 산업 R&D 예산안 마련시, 분과별 전문가 검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등 민간의견 적극 수렴
 -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에 '25년 총 1.2조원 투자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10대 분야 35개 프로젝트
- `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901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85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누구나 특례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업 가능
 - * '25년 단년도 승인건수('25.12월말 기준) : 193건
 - 472개社(52%)는 사업개시에 성공하여 (누적)매출 1조 6,163억·투자 1조 6,076억원, 2,422명 신규고용 등 경제적 성과 창출(`25.12월말 기준)
- 글로벌 개방혁신을 적극 활용, 중소·중견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
 - 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확대* 및 국내연구자 200여명 파견
 - * '25년 해외협력센터 총 8개소(MIT 등), 56개 과제, 1,040억원 지원
 - 중소·중견기업연구소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2,895억원 규모 예타사업 통과
 - * 글로벌 우수 기업연구소 육성사업('26~'31, 총사업비 2,895억원)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법 개정안 및 제9차 기본계획안 마련
 -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 완화, 기술이전 방식 다양화 등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이전법 개정 추진
 - *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25.6.30.) → 국회 산중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9.25.)
 -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본계획인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안('26~'28)'을 통해 중기 기술사업화 정책방향을 수립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 2,781억원 달성(전년대비 12% 증가)
 - * 2025년 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근거

○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 선정 추진

* 선정된 전략산업을 포함한 가칭「5극3특 성장엔진 추진전략」 발표 예정('26년)

－ 성장엔진 집중육성을 위한 성장 5중세트* 범부처 지원패키지 발굴·구체화

* 규제완화, 인재양성, 금융지원, 재정확보, 혁신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 확대

* ▲ 지역혁신클러스터 등(기술개발)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인프라) ▲ 한국형 퀵스타트(인력양성) ▲ 지역산업활력펀드(금융지원) 등

○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위기에 선제 대응

－ 既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중심으로 약 1.4조원 투자 유치 성과 달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투자 활성화

* 지원한도 상향(100억원 → 150억원),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등

－ 여수(석유화학), 서산(석유화학), 포항(철강)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 대출이자 지원,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 등 지역 수요별 맞춤형 지원 제공

○ 디지털·친환경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 스마트그린산단 지원 강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 (스마트그린 vs. 전체산단) 1인당 생산 증가율 10.5% vs. 6.4% / 수출 증가율 9.8% vs. 7.3%

－ 산업단지 AX 가속화를 위한‘AX 실증산단’구축사업 착수*

* 반월시화, 창원, 천안, 여수 등 10개 산단의 AX 지원 ('25년 신규, 400억원)

－ 노후 산단 근로·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최근 5년내 최고의 고용 실적 달성

* 전년동기대비 전체 산업단지의 고용 3만명, 생산액 13조원 증가

－ 문화선도산단 최초 선정('25.5) 등 노후산단 활성화 기반 마련

* 구미(섬유전자), 창원(기계·방산), 완주(자동차수소) 3개소 지정 → 문화시설·프로그램 확충

○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월드클래스 플러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 도약” 및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등 중견기업 기술역량 제고(655억원 규모)를 통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중견기업 수요맞춤형 인력 확보 지원

- 역대 최대 규모의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 청년층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中堅 인력애로 해소

○ 유통산업 발전 도모

- 유통망 해외진출, AI·데이터 활용 확산 등 변화된 유통·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전산업 R&D의 효율적인 투자로 가시적 성과창출 노력 강화

- 시장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산업기술 R&D의 효율적인 투자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

- (성과지표) 경제성장률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사업화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25년 12월 기준, '30년 연구개발 사업화율 목표치는 51.7%

전략목표 3.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고도화한다.

성과지표

GDP 대비 무역규모 비중(%)

□ 성과지표 개요

〈 GDP 대비 무역규모 비중(%) 〉

- 개념 :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 일반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해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의미
- 조사기관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 조사대상 : 157개국(2023년 기준)
- 조사방법 : 관세청, IMF, World Bank 자료를 기초로 통계청이 작성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발표하는 GDP대비 무역규모 비중(무역의존도)
- 측정산식 : 수출입총액/GDP(GNI)

□ '25년 측정결과

- 202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무역규모 비중은 70.1%로, 전년말 대비 0.8%p 증가하였습니다.

* (수출 683,609백만불 + 수입 631,767백만불) / 명목GDP 1,874,560백만불 x 100

** 출처: 수출입-무역협회, 명목GDP-한국은행

〈최근5년간 동향〉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무역의존도	56.19	64.87	78.67	69.3	70.1

* '26.1월 현재 2024년 한국 통계까지 발표

□ 성과분석

- 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산업-통상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정부·산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총10회의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맞춤형 홍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통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 장관·본부장 기고 6회, 방송·인터뷰 19회, 기자간담회 총 22회, 브리핑 2회, 언론사 활용 홍보(강연, 축하 등) 17회 / 월간 「통상」 배포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 진행
-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통해 對美 수출 및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였고,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현안에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 11.14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전략적 투자 MOU 서명 등으로 관세인하 및 우리 기업의美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시 B-1 비자 및 ESTA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주한미대사관內 전담데스크 설치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북미지역 우리기업의 이익과 관련하여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유지, 반도체법 투자세액공제 상향(25%→35%)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 '미국 비즈니스 비자(B-1) 및 허용 용도' 관련 美 국무부 팩트시트 게재(10.5, 주한미대사관)
- 유럽, 중남미, 대양주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EU의 경제·환경·노동입법, 철강규제, FSR조사 등 다양한 현안에 연중 대응하는 한편, 한-독 통상정책대화(1월), 한-불 산업협력위(12

월), 한-체코 공급망에너지대화(9회)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한-EU FTA 무역위원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분야별 하위 이행위원회 및 이슈별 작업반을 정례 개최하였습니다.

-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등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하여 진출 기업을 밀착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고위급 교류, 한-멕 FTA 재개 등을 통하여 산업·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신정부 다자회의 등 계기 주요국·단체와의 고위급회담을 주도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사업활동을 지원하였고, ODA 등 플랫폼을 통하여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 APEC 정상회의(10.31~11.1) 계기 아태지역 경제체, WTO, ICC 고위인사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였고, G20 무역투자장관 회의(10.10) 계기 12개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의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사업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고, 몽골, 우즈벡, 베트남 등 개도국과의 핵심광물 ODA를 활용하여 기업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중국과의 다층적 소통*으로 기업애로 해소 등 민생에 기여하는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하였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4.4)에 韓中 공급망 핫라인 회의(7.3) 등 공급망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주요 면담 계기 수출허가 발급 협조를 요청하여 다수 기업의 수출에 기여하였습니다.

* (장관급) 상무장관회의(2회), 에너지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본부장-상무부 협상대표, 3회)
(실·국장) 통상당국 고위급회담(차관보-상무부 부부장), 한중 공급망핫라인(국장급)
(지방정부) 산동경제통상협력교류회, 광둥발전포럼, 지린동북아박람회, 랴오닝투자무역상담회

- 일본 경산성과 고위급 소통(장관 3회, 본부장 6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 경제안보 등 분야별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및 경제계 민간 교류 행사를 지원(총8회)하여 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韓日 3대 협력사업(에너지 슈퍼그리드 연결, 경제안보 공급망 대응, 미래연료 파트너십 구축) 등 새로운 산업협력 아젠다를 발굴하였습니다.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특화 전략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투르크멘,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플랜트, 희소금속, 핵심광물 등 경제 외교를 강화하였고, 러·우 終戰 대비 양자 경제협력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 정부의 첫 국민 방한이었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시 교역·투자, 원전, 핵심광물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자회의 계기 말련·캄보디아(아세안), 베트남·인니·싱가포르·태국·필리핀(APEC), 인도(G20) 정상회담으로 경험 모멘텀을 강화하였습니다.
 - UAE 국민 방문 계기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제3국 원전·자원 공동진출 등 전방위적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고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여 문화, 방산,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 총5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인태지역內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조기 확립하고 교역 및 산업구조, 투자환경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 IPEF 공급망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정례회의와 2차례의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개최하여 공급망 분야 다자 협력의 모멘텀 및 연대를 유지하였

습니다. 특히 2차 회의는 일본, 호주 등 10개국을 초청하여 대면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 핵심광물, 소부장 등 실질적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 협력국과의 '한국형 공급망 파트너십(SCPA)' 확대를 추진하였고, 한-호주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디지털 통상규범 선도국가로 부상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정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타결(3.10) 및 제2차 한-싱 디지털 경제대화 개최, DEPA 가입희망국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내 디지털통상 석·박사과정, 재직자 비학위과정 등을 운영중이며, 민관합동 디지털통상 대응반 등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 기후·에너지 통상규범 논의에 선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청정경제 시장 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일방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외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기업 역량을 지원*하였습니다.

* '25년 3월(서울, 400여명), 6월(서울, 400여명), 7월(대구, 300여명), 10월(대전, 200여명), 11월(포항 예정), 12월(서울 예정) 합동설명회 개최(연 6회)

** 누적 2,736건 상담 진행(전화·온라인·방문 합계, '23.9~'25.9(월평균 110여건))

*** 중소기업용 대응 매뉴얼 발간(5월), 연간 관계부처 합계 285개社 컨설팅 지원

청정경제 관련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산업부는 통상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 업계,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주요국과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 －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선제적 대응하여 통상규범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략목표 5. 수출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통상의 연대 구축을 위해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성과지표1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 성과지표 개요

<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

- 개념 : FTA 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포괄하는 대표적 지표로,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상대국과의 교역 확대, 경제성장 촉진 및 후생증대 정도와 연관
- 조사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조사대상 :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국(59개국)
- 조사방법 :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한국무역협회가 작성,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측정산식 : (FTA발효국 교역액/우리나라 전체 교역액)*100

□ '25년 측정결과

- (달성 난이도) 트럼프 美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며 對美 교역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태
- (달성 노력)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가입, 한-UAE CEPA 등 협정 발효를 위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 완료한 바, 향후 두 협정 모두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경우 교역 비중 78%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절차) 협상 개시 → 타결 →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 서명 → 국회 비준 → 발효

** (FTA 발효국과 교역비중) 71.5%(‘21) → 77.2%(‘22) → 78.2%(‘23) → 76.8%(‘24) → 76.8%(‘25)

< FTA 발효국과의 교역현황('25년) >

(단위 : 백만불)

전체	FTA 발효국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소계
1,341,158	6,413	8,427	204,675	25,651	136,869	3,191	196,214	10,661	46,265	1,030,510 (76.84%)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RCEP (일본)	이스라엘		
	16,776	272,729	4,757	2,578	2,919	11,713	77,212	3,460		

* 과테말라(391백만불, 0.03%), UAE(19,778백만불, 1.47%) 등은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完

□ 성과지표 개요

- (목적) 美 신정부 출범 후, 급증하는 주요국 수입규제·철탱 보호 조치 및 통상분쟁에 적극대응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
- (대표성) 통상현안·분쟁 관련 대내외 협의·정부의견서 제출·법률 검토 등은 동 업무 관련 정부업무 쉐프로세스 포괄
- (목표치)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제3자·잠재분쟁 관리 필요성 증대로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대비 119%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 실적) '22년 121건 → '23년 160건 → '24년 160건 / ** ('25년 목표치) 175건

□ '25년 측정결과

- 철탱 보호무역주의 및 수입규제 관련 민관협의·법률검토·對조치국 협의 등 132건, 제3자·잠재분쟁 관련 법률검토 등 99건, 총 231건 수행으로 목표대비 132% 달성

〈 통상현안 대응 관련 대표 실적 〉

-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관련 대응역량이 미비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법률·회계 컨설팅 제공사업 지속추진('19년~)
 - '25년은 트럼프 정부의 철·알·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의 정보 적기 파악 및 대응 어려움을 조기 감지
 - ⇒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원산지 증빙서 및 의견서 작성 대행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컨설팅」 신설로 기업들의 접근성 향상
- **(상계관세 관련 美 CIT 승소)** 美 상무부는 우리 정부 프로그램(전기요금, 탄소배출권)에 대한 보조금성 판정, 이에 따라 우리 철강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처분
 - ⇒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CIT 소송에 참여하여 3차례(일반후판 1,2차, 탄소합금 후판 1차) 파기환송 결과 도출

□ 성과분석

1 신흥시장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다변화

◆ ①신규 FTA 여건 조성 → ②협상 타결 및 발효 → ③기발효 FTA 이행 및 ④활용 강화 등 **쏠주기**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

① (신규) 신규 통상협정 여건 조성 및 협상 개시를 추진하였습니다.

- (CEPA 협상 개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신흥국들과의 협상세칙 (ToR) 합의 및 서명, 협상 개시 선언 등을 통해 CEPA 체결 여건을 조성

* [아시아] 파키스탄 협상개시(25.1) 및 ToR 서명(25.9), 방글라데시 ToR 서명 및 협상개시(25.8)
[아프리카] 탄자니아 ToR 합의(25.10), 이집트 공동연구 완료 및 협상 추진 합의(25.11)
[중남미] 멕시코 주한대사 면담(25.2), 업계간담화·수석대표회의(25.3), 통상장관회담(25.5-10)

- (CPTPP 가입 추진) 호·뉴 등 주요 회원국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가입 지지 기반을 확보, 산업별 득실 분석 등을 통해 적정 가입시점을 검토

* 호주 국장급 면담(5.19) 및 통상장관 면담(9.24), 뉴질랜드 통상장관 면담(9.24) 등

- (모듈형 협정 추진) 추진여건·협력분야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대상국 모색 → 성장잠재력, 핵심광물(니켈·리튬 등) 등 협력수요 큰 브라질과 추진 협의

* 브라질 측에 新통상협정 추진 제안서 송부(2.26, 4.23), 과장급 화상면담(5.9) 등

② (협상)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상을 전개하였습니다.

- (타결·서명) 말련 FTA 타결 완료(10.27), 한-영 FTA 타결 완료(12.15), 에콰도르 SECA 서명(9.2) 등을 통해 통상 네트워크의 확장 기반을 마련

- (후속절차) 타결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산업부-외교부-법제처 간 공동협의 개최 및 표준 메뉴얼에 합의, 국회(외통위)에 비준동의안 제출

* 과테말라 비준동의안 제출('25.1) 및 본회의 의결('25.12), UAE 비준동의안 제출('25.11), 에콰도르 차년도('26.上) 비준동의안 제출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등

- (협상 가속화) 방글라데시·세르비아 등 여건 기반이 마련된 신흥국들과 신규 CEPA 협상에 착수, 중국·태국 등 주요국들과 지속적 협상 개최

* 방글라 제1차 협상('25.8), 세르비아 제1차 협상('25.12), 중국 제10~12차 협상('25.1~6), 태국 제7차 협상('25.9) 등 공식 협상 다수 개최

③ (이행) 통상협정의 체계적 이행관리 및 규범 현대화 추진하였습니다.

- (협약체 운영) 아세안 FTA, RCEP, IPEF 등 통상협정 내 이행기구 적극 참여 및 협력사업 수행 → 협정 이행상황 평가 및 역내 협력 가속화

* [이행위] 아세안('25.6~9, 3회), RCEP('25.7~10, 4회) 등 / [공동위] RCEP('25.5~12, 4회) 등

- (규범현대화) 기발효 FTA 규범현대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공청회 개최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개선 협의 시 우리 측 민감성 고려

* [간담회] 싱가포르 FTA 관련 항공 MRO 업계 간담회('25.4) 등

[공청회] 싱가포르 FTA 개선 공청회('25.7), 아세안 FTA 개선 공청회('25.9) 등

④ (활용) FTA활용 촉진 지원 및 FTA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활용지원) FTA 활용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통상현안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 [전문상담] 15,684건 / [컨설팅] 4,800개사 / [교육] 6,973명 / [설명회] 7,528명 ('25.9)

- (피해대응) 통상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혁신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1.1. 개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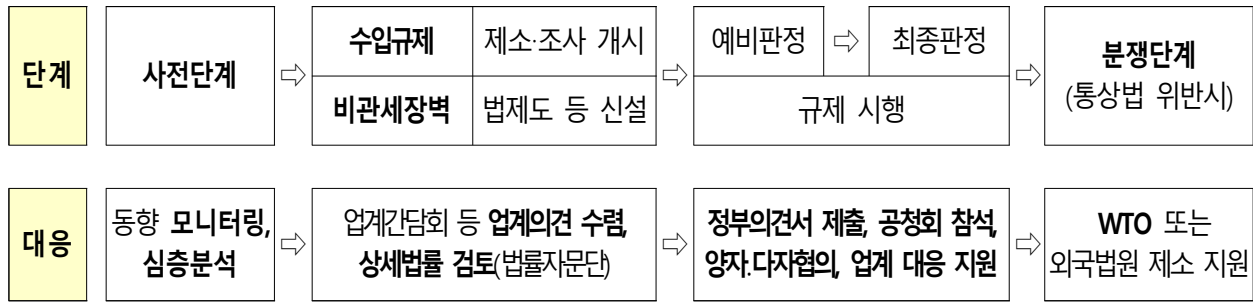
2 수입규제 대응 및 다자무역체계 글로벌 리더십 강화

1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新보호무역) 美 신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조치 확산에 대비, ①232조 관세 등 신규 관세·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신속 전파, ②업계 지원 강화, ③민관합동 대응체계 강화 등 전방위·전주기적 대응체계 운영
 - (美 철강 232조) 관세율·대상품목 지속 확대 중인 철·알·파생 관련, 정책 발표시 즉각 관련 정보 전파, 기업의 대응 혼선 최소화
 - (업계 지원) 업종별 美 수입규제 릴레이 설명회, 중소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 조기·확대 시행 등 피해기업 밀착지원
 - (민관합동 대응체계) 정부-업계-로펌 간 상시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법무역량 강화, 민관합동 협의·대응체 등 가동
- (수입규제) ^{·美반덤핑}화학제품 최종판정 덤핑마진을 축소, ^{·美상계관세}철강제품 美 CIT(국제무역법원)소송 3차례 승소, ^{·튀르키예 반덤핑}철강·화학제품 경쟁국 대비 낮은 덤핑마진을 판정 등 우리 업계 부담경감에 기여

주기적 수입규제 대응체계 흐름도

①사전단계 모니터링·법률검토 → ②규제 시행단계 밀착지원 → ③통상법 위반시 분쟁대응



② APEC 개최 및 다자협약체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 (APEC 경제인 행사) 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인 행사 성공 개최 → K-기업 위상 제고 및 국가적 성과 창출

◆ 대규모 투자유치(90억불), AI 분야 협력 강화(AWS/엔비디아), 역대 최대 수출계약(4.3억불) 등 경제적 성과 거양

* (투자)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투자계획 90억불(13조원) 유치
(수출) 「수출 붐업 코리아」 수출계약 등 4.3억불 성약
(협력) 국내 AI 데이터 센터 추가 구축, 국내기업 최신 GPU 26만장 공급 등

- － ‘CEO Summit 및 부대행사, ‘수출·투자·혁신 등 연계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 성과 확산 및 시너지 극대화 추진

* (CEO Summit) 총 1,800여명(기업 1,583명, 기관 269명)의 글로벌 경제인 참석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2,000여명), K-Tech 쇼케이스(11,000여명) 참석
(연계행사) 글로벌 투자가(212개社), 해외 바이어(70개국, 약 1,700개社) 등 訪韓

구분	10.27일	10.28일	10.29일	10.30일	10.31일	11.1일
경주		CEO Summit				
	퓨처테크 포럼			퓨처테크 포럼		
		K-Tech 쇼케이스				
서울 등	[수출] 붐업 코리아 Week 산업부(10.21~11.7일, 10.21일 개막식)					
		[혁신]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 중기부		[투자]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산업부(10.30일 개막식)		

- (다자협약체) APEC 한국 주도 아젠다 연계 등 WTO/OECD/G20 다자협약체 논의 주도 및 협력 공고화, 글로벌 위상 강화
- － (WTO) ▲WTO 사무총장과 고위급 면담*(5회)으로 긴밀한 협력 강화,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편입** 주도(한국 공동의장), ▲우즈베크의 WTO 가입(한국 의장) 지원*** 등 제14차 각료회의(26.3월, 카메룬) 성과 창출 기반 조성

* WTO 사무총장 면담 5회(장관 5월, 본부장 1월 1회, 5월 1회, 10월 2회)

** ▲APEC 통상장관회의의 공동성명(5월) 內 IFD 포함, ▲투자원활화 고위급 대화(본부장 개회사, 9.16)

*** ▲가업직업반(6.11월), ▲의장직 승계(7월), ▲우즈베크 역량강화 지원 우측 8개 부처 공무원 초청 경험 전수(8월)

③ 무역협정상 법적 이슈에 적기 대응하며 우리 통상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 (진행중 분쟁 대응) 상소계류중인 분쟁*에 선제 대비, 최근 WTO 논의동향 모니터링 및 법률전문가 협의를 통해 우리측 논리 강화

*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한미 철강·변압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 등

- 타 회원국간 WTO 분쟁*에 3자 참여, 신규 법리형성 과정에 우리나라 핵심 이익을 반영하고 WTO 내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캐나다-중국 전기차, 튀르키예-중국 전기차, EU-중국 신배터리전기차 분쟁 등 7건

- (잠재적 분쟁 관리)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분쟁예방을 위한 ‘잠재적 통상분쟁 대응체계’ 구축

- 주요국 통상정책·법령·제도에 대한 리스크 조기 식별, 상세 통상법 분석, 분쟁절차 활용 검토, 업계 대응력 제고 지원

- WTO 수산물분쟁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관련 대응방향 설정에 기여

* 후쿠시마 오염수 국조실 TF 참여, ^日식품수입규제조치 관련 산업부·식약처·로펌 업무협의 등

- (분쟁대응 기반구축) WTO 분쟁해결체제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WTO 「Public Forum 2025」에서 국가 간 분쟁사안 발생 시 중재, 조정과 같은 대안적 메커니즘 활용 제시

-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8.26) 개최, 「통상법무정책」 발간(연 2회)* 등을 통해 분쟁대응 미래세대 육성 및 저변 확대 도모

* 대회 ▲전자파일 대중공개, ▲민간기업·학계·공공기관 등에 인쇄본 약 4천부 배포

□ 향후 추진계획

- 글로벌 통상질서 대변혁기의 국익확보를 목표로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및 **新 통상규범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신흥시장 통상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수립하여 상대국과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기타결 협정의 조속한 후속절차 추진(발효UAE, 에콰도르, 서명 GCC, 영국, 조지아, 말련)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상협정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FTA 국내 산업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수립·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외 수출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新통상규범 등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
 - 또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규제로 인한 각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주요국 철강 보호무역조치 강화 관련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EU, 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조치 대응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협의하여, 상대국과 협상을 개시하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G20·APEC·OECD·WTO 등 다자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자무역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과잉, ▲AI 혁신·공급망 등 핵심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겠습니다.

성과지표

1. 연간 수출액
2.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 성과지표 개요

■ 1 수출액(억불)

- 국내 통관절차를 거친 연간 수출금액의 합계(관세청)

■ 2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억불)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

- 개념 :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이 있음
- 조사기관 : 산업통상부
- 조사대상 : 당해연도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증액투자 및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내용 집계
- 조사방법 : 신고 접수 된 실적치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집계
- 측정산식 : 외국인직접투자실적 규모 집계(신고기준)

□ '25년 측정결과

■ 1 (수출액) `25년 수출 7,097억 달러(`24년 대비 +3.8%), 무역수지 780억 달러(`24년 대비 +262억 달러 개선)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 달러로 사상 최초 7,000억 달러 돌파 및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Delta 0.04\%$), 6월 이후 7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 또한,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면서 '17년(+952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인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무역수지(억 달러) : '19+389→'20+449→'21+293→'22△478→'23△103→'24+518→'25+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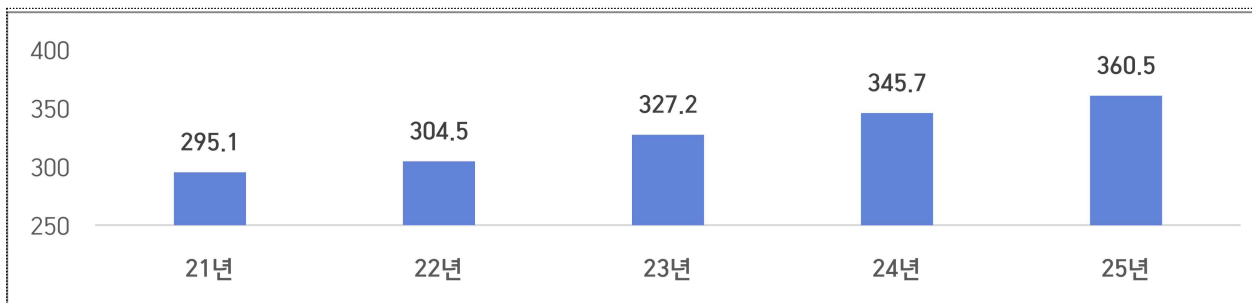
2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 계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2년 이후 “4년 연속 300억불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25년 누적 FDI 실적(단위 : 억불) >

구분	3년 평균 ('23~'25)	'23년	'24년	'25년	전년대비 증감
신고	344.5	327.2	345.7	360.5	+4.3%

< 연도별('21~'25) 신고액 (단위 : 억불) >



□ 성과분석

1 수출액(억불)

- 美 관세,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하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 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집중하였습니다.
 -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25.2.18.)」과 범부처 합동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25.9.3.)」을 통해 범부처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2차례), 수출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 － 특히,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K-소비재 유통기업 간담회를 통해 K-뷰티, K-

푸드 등 소비재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중소·중견 수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보증료 할인 등 역대 최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수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중견 지원실적(조원) : ('21)66.6 → ('22)76.8 → ('23)86.7 → ('24)97.0 → ('25)108.9

2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억불)

- 국가전략기술·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APEC 등 글로벌 대규모 행사와 연계한 ①전략적 IR, ②인센티브(현금지원, 입지지원) 강화, 고위급 간담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한 ③현장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④외투기업 전용 R&D 사업 확대, ⑤채용박람회 개최(IKS)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국내 정치적 불안(비상계엄-탄핵), 美 트럼프 관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여건 속에도 5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1 수출액(억불)

- 금년에도 수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M.AX(제조 AI 전환) 전략을 필두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 수출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 미·중 통상현안을 면밀히 관리하는 동시에, 日, EU, ASEAN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인 275조의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물류·인증 등 수출 현장애로를 끝까지 해소해나가는 등 우리 수출 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억불)

- '26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❶전략적 유치품목·기업을 선정하여 IR 역량을 집중하고, ❷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방유치 가속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한편, ❸고위급IR 추진 및 Invest Korea Summit 등의 계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핵심유치 기업의 경우, 현금·입지·세제 등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반영된 '맞춤형 제안서'를 선제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집중 유치하고,
- 우리 산업·외교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원팀(중앙정부-지자체-KOTRA 등 유관기관) 방식으로 고위급 국내외 IR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6. 표준·인증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사회와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지원한다.

성과지표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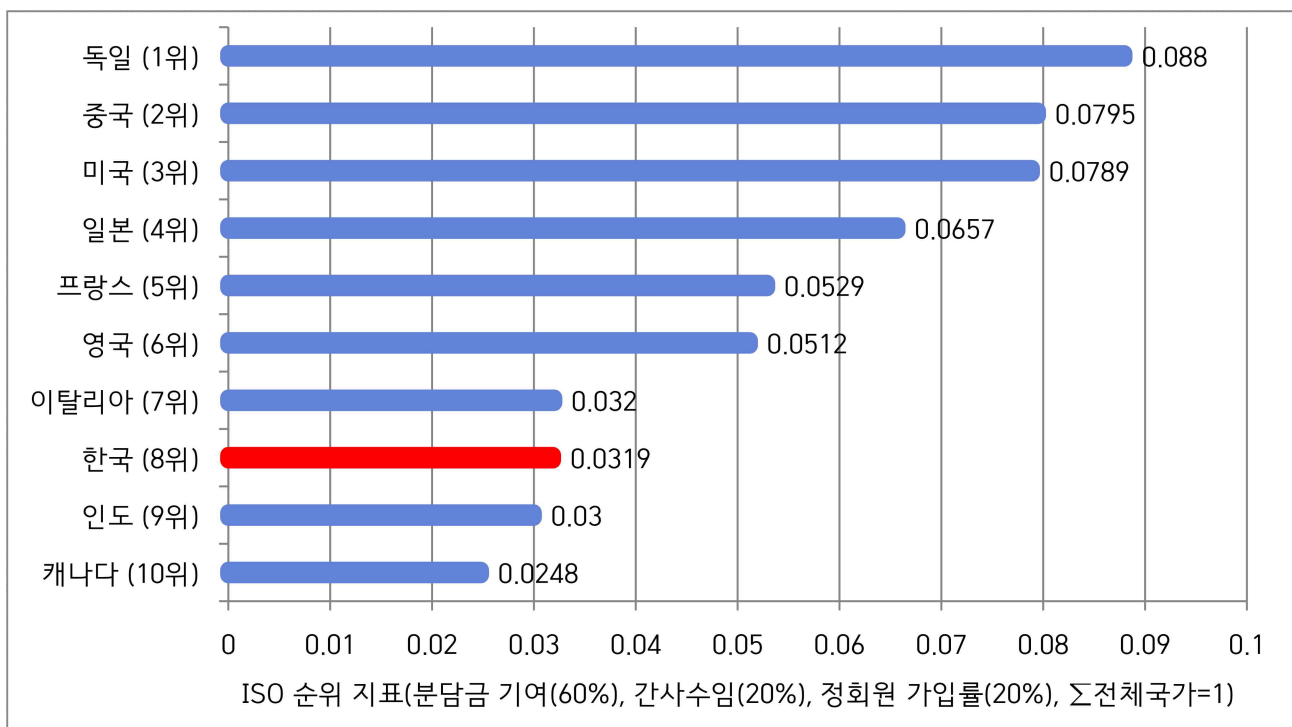
□ 성과지표 개요

〈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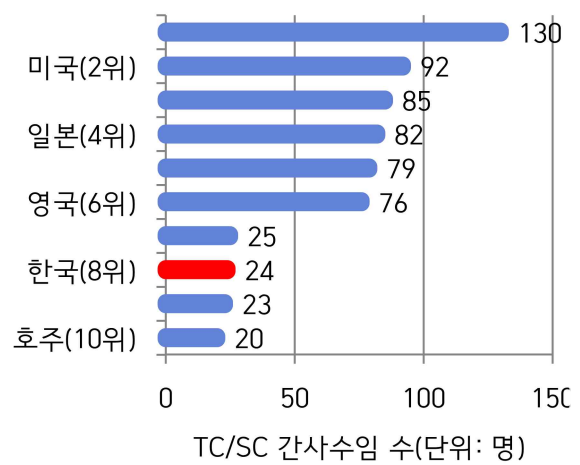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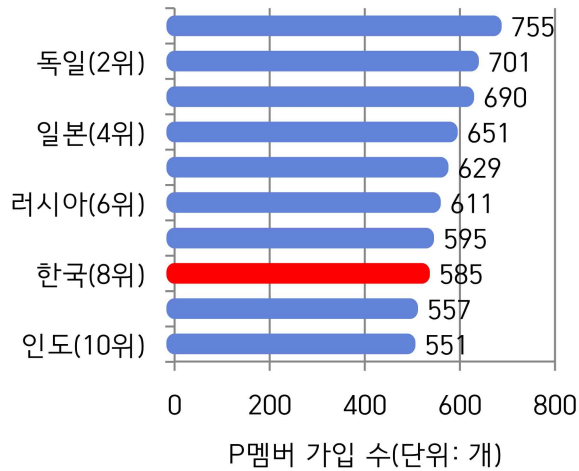
- 개념 : 국제표준화기구(ISO) 활동 국가 순위
- 조사기관 : 국제표준화기구(ISO)
- 조사대상 :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회원국
- 조사방법 : 연도·국가별 분담금 기여, 간사 수입, 정회원 가입률 집계
- 측정산식 : 분담금 기여(60%), 간사수입(20%), 정회원 가입률(20%)

□ '25년 측정결과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25년 기준 국제표준화활동 순위에서 한국은 '24년과 동일한 세계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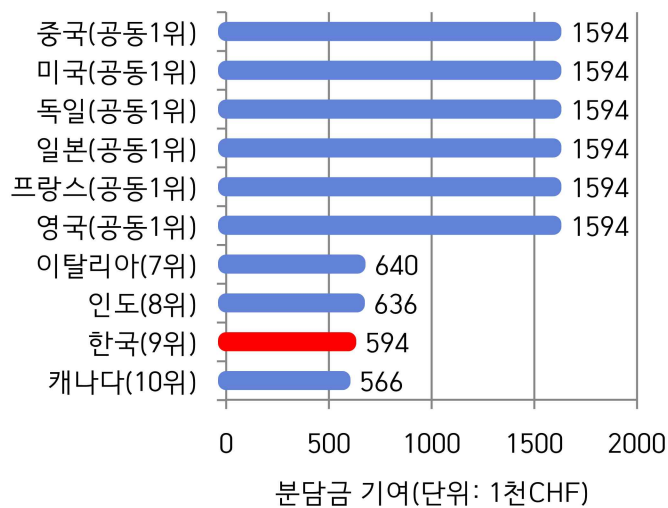


- 종합 순위를 책정하는 지표별로는 기술위원회 정회원 활동(가입) 8위, 간사 수임 8위(24명), 부담금 기여 9위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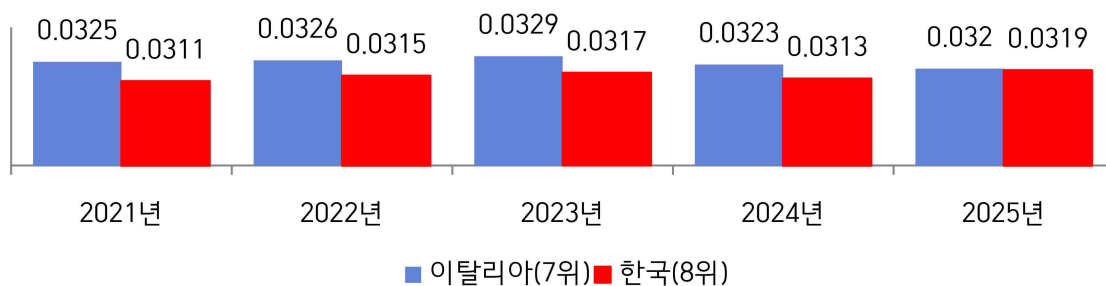
< 기술위원회 정회원 활동(가입) : 8위 >

< 간사 수임 : 8위 >



< 부담금 기여 : 9위 >

- 한국의 최근 5년간 국제표준화 활동 순위는 8위로 변동이 없으나, 7위(이탈리아)와의 격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1년 0.0014 → ’25년 0.0001)



□ 성과분석

-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제무대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제표준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조성환, '24~'25)을 배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정책을 주도하였으며, **국제표준화기구 기술관리이사회(ISO TMB)***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장전략이사회(IEC MSB)**** 이사 재선출, 중전압 직류배전(MVDC) 신규위원회 설립, 국제 AI 표준 서밋 개최 및 서울선언 발표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문영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임기: '26~'28

**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임기: '25~'27

- －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내 임원 수입 인원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였으며, 미국·독일 등 글로벌 기술표준 강국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여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입지 제고를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21년) 243명 → ('22년) 250명 → ('23년) 263명 → ('24년) 273명 → ('25년) 297명

** 한-미 표준협력포럼('25.12월), 한-독 표준협력 대화('25.12월), 한-캐/한-이태리 MOU 체결('25.10월) 등

-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선도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바이오 등 **첨단·신유망 분야 국제표준 97종을 제안**하였습니다.

- － 또한,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운영하며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실상표준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발표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표준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 세상을 바꾼 10대 표준/한국인의 삶과 경제를 바꾼 10대 표준 선정·발표, 다수의 홍보자료 및 영상 배포

- 아울러, 국내 산업계의 AX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MAX 얼라이언스」 내 표준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6대 산업(제조, 자동차, 선박, 로봇, 드론, 가전)의 수요기업, 표준전문가 120여명 참여

-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표준 개발 과제 10건을 발굴하였으며, 한국인(성인·고령자·아동·청소년) 인체치수를 측정·보급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국가 표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사후 시장감시는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은 높이면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시장감시 강화 관련으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성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4,697건(‘25년 기준) 제품을 조사하였고, 222건의 불량 제품을 리콜 및 리콜권고 하였습니다.
- 특히 해외직구 플랫폼 확대에 따라 해외직구 제품 대상 안전성조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1,004개)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133개에 대해서는 제품 정보 공표 및 플랫폼에 판매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해외직구 안전성조사, 해외직구 플랫폼업체 대외 공표, 판매금지 조치 등 조치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개정 공포(‘25.12.21.) 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에 안전한 제품만 수입·반입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세관에서 통관단계 수입제품 9,260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2,747건의 위해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품목별 사고빈도, 행정처분 리콜, 제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량·정성적 평가지표를 적용한 **안전관리 품목 조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안전인증 품목 5종(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비데)를 안전확인으로 조정

- **어린이제품 표시사항(사용연령 등) 및 주의사항 결함**으로 높은 부적합율 및 영유아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4개) 및 안전확인(17개) 품목에 대해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25년부터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시사항 결함은 안전성조사에 따른 부적합 제품 중 70% 내외 주요 적발 요인
개선조치 권고처분 건수 : ('23) 649건(73.5%), ('24) 695건(74.3%), ('25) 650건(74.7%)

- **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적합성평가 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 신기술·신제품 인증, 융합특례인증 등 **다양한 적합성인증제도를 운영**(‘25년 총 1,186건 신청)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 **제품의 국내·외 출시에 필요한 인증·표준 정보를 제공**(‘25년 총 221,524건)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힘썼으며,

- 국내 신수요 분야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전략 마련 및 지원을 위해 **유망시험인증서비스 개발**(‘25년 7건),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25개 제품군),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최신 인증정보 제공(136개국 667개 인증),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을 위한 시험인프라 기반구축 완료(‘25.9)

- **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시험, 교정 등 7개 분야)를 통해 **국내성적서의 국제통용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 제품의 해외인증 지

원을 위해 선박기자재 분야 KOLAS-미선급협회 간 시험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MoU 체결('25.10월) 및 이동식 부탄 연소기 호주 인증 획득('25.8월)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정량표시상품의 관리방식 개선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의 첨단화 및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계량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 (정량표시상품) ❶국제적 관리방식(평균량 확인) 도입*, ❷관리대상(27종 → 모든 포장 상품) 확대, ❸시판품 조사 결과 대국민 공표 근거 마련, ❹전담기관 지정 등 「계량법」 입법 발의(11.19.)

** (산업계량)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계량 지원센터 지정·운영, 측정 결과의 DX 지원 등 산업계량 지원을 위한 「계량법」개정(안) 발의 추진 中(김원이 의원실 협의 완료)

-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계량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고, 시장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 상거래 신뢰성 제고에 힘썼습니다.

* ❶수소 전주기 계량 신뢰성 강화를 위한 보급성 기반 구축(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199억), ❷'27년 재검정 도래, 재검정 수요에 대응 장비 개발(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11억원)

** 시판품 조사(1,017건), 소비자감시원 적발·계도(1,516건), 불법계량기 신고처리(270건) 등 2,803건

-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선진화하여 기업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 － 해외 규제 당사국과 284건의 해외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13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 협의/해소 : ('22) 209건/60건 → ('23) 224건/62건 → ('24) 236건/63건 → ('25) 355건/137건

- － 특히, 아세안 국가 등 수출 신흥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및 성과 분석

- **(베트남 배터리 규제 개선)** 정보통신기기용 리튬배터리에 기존의 안전시험에 성능 시험을 추가로 요구하여 기업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필수 안전시험만 요구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약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유지**
- **(콜롬비아 자동차 규제 개선)** 자동차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 대해 국제표준과 상이한 인증기준을 요구함에 따라 기업 인증취득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부합화하도록 의견 제출 및 개선하여 약 3억 달러 규모의 **수출시장을 확보**
- **(태국 가전제품 규제 개선)**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 동일 모델에 대한 반복 시험 및 자국 내 지정 시험소 성적서만 인정하여, 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국제공인 시험소 성적서 및 동일 모델의 시험 성적서 또한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산업계 애로 해소**

- 또한,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5년 79개 법정 인증제도의 필요성, 완성도 등을 검토하여 통폐합 24개, 개선 43개 총 67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확정*하여 규제 합리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제594회 규제개혁위원회('25. 11.),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26. 01.)

국내 인증제도 정비 사례

- **[폐지 사례]** '3D 프린팅 SW인증', '철도서비스 인증' 등 기준이 부재하거나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
- **[통합 사례]**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 운영
- **[개선 사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

-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인증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인증 관련 기술규제영향평가 시 기술규제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를 필수 개최하여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중입니다.

* '25년 중 기술규제위원회 20회, 전문분과위원회 25회, 기술규제연구포럼 2회 개최 등

□ 향후 추진계획

- 24~25년 축적한 경험과 전략적 표준외교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특히,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신시장 창출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및 사실상 표준화를 본격 추진하고, 미국·독일 등 표준강국과 JEDEC 등 주요 사실상 표준화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수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15대 표준화 분야 : AI, 양자, 첨단제조, 이차전지, 반도체, 미래차, 디스플레이, 미래선박, 로봇, 핵심소재, 청정에너지, 원자력, 첨단바이오, 메타버스, 항공우주
- 아울러, M.AX 내 타 얼라이언스와 협력하여 기업 수요 기반의 「AI 산업융합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표준을 적기에 신속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글로벌 유통 및 제품변화를 고려한 신수요 제품의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AI기술 등을 활용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모두가 신뢰하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 조정,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전규제의 합리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험인증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 AI 신뢰성 평가 등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및 시험장비 연구개발 지원, 「유연한 인정범위 제도」 도입으로 공인 성적서 신

속 발급, 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 등 수출 기업 지원 강화로 시험 인증 산업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험인증산업 발전 전략」 수립으로 신수요 시험·인증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 첨단 제조 공정 및 신산업 분야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업 계량을 본격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량표시상품 관리방식 개선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기술규제 혁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규제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 해외 기술규제와 인증정보를 중소·중견기업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업과 협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